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296-01

2022. 12.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정책 방안 마련 요약보고서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정책 방안 마련」 과제의 최종 요약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상 효 (연구 위원)

연구참여자: 이 계 임 (선임 연구 위원)

이 용 선 (명예선임연구위원)

김 창 호 (전문 연구 원)

김 정 환 (연구 원)

이 욱 직 (연구 원)

이 희 성 (연구 원)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내용 및 방법 3
- 3.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 1. 국내 식품산업 현황 11
- 2. 식품산업 주요 업종별 현황과 문제점 27
- 3. 식품산업의 당면 문제점 35

제3장 국내외 식품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 1. 국내 식품산업 정책 동향 43
- 2. 국외 식품산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식품산업 정책의 시사점 48

제4장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의 평가

- 1.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달성 평가 51
- 2. 세부 사업별 평가 58

제5장 식품산업 전망과 4차 진흥정책 전략도출

-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식품산업 전망 67
- 2.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대응 전략 도출(SWOT 분석) 79

제6장 제4차 진흥계획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 1.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의 기본 방향 83
- 2. 제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안)의 정책과제별 주요 내용 86

제1장

〈표 1-1〉 개정 식품산업진흥법(2022.01.01. 시행) 제4조 기본계획 관련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5

〈표 1-2〉 선행연구 키워드 정리 7

제2장

〈표 2-1〉 식품산업 매출액 12

〈표 2-2〉 식품산업 영업비용 구성 요소별 추이 및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17

〈표 2-3〉 식품산업 국산 원료 사용량 추이 18

〈표 2-4〉 시작연도별 분야별 미래유망식품 R&D 과제 건수 및 기간, 금액 22

〈표 2-5〉 대체육 국내 정부 R&D 투자 규모 23

〈표 2-6〉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 25

제3장

〈표 3-1〉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흐름 44

〈표 3-2〉 식품산업 진흥 관련 법률 45

〈표 3-3〉 주요국 정책 동향 요약 48

제4장

〈표 4-1〉 연도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예산(2017-2022) 57

제5장

〈표 5-1〉 전세계 식품시장 규모(시장구분별) 71

〈표 5-2〉 전세계 식품시장 규모(대륙별) 72

〈표 5-3〉 세계 농림축산식품 시장규모 추정(2020-2024) 73

〈표 5-4〉 거래 형태별 글로벌 농림축산식품 시장규모 추정(2020-2024)	73
〈표 5-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78
〈표 5-6〉 식품산업 진흥에 대한 SWOT 분석	79

제6장

〈표 6-1〉 제3차 및 제4차(안)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비전, 목표, 주요 과제 비교	85
〈표 6-2〉 우리나라 푸드 스타트업(협업)의 유형	97
〈표 6-3〉 모태펀드 분야별 개선방안	98
〈표 6-4〉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	122

제2장

<그림 2-1> 식품제조업 평균 비용구조 18
<그림 2-2> 농림수산물 부류별 수출금액 추이 19
<그림 2-3> 농림축산식품분야 R&D 추이 21

제5장

<그림 5-1>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된 요소의 구조도 69

제6장

<그림 6-1>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84
<그림 6-2> 범부처 협의체(안) 107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식품업계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이 5년간 식품업계의 성장을 견인할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8~’22)」 수립이 필요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의거한 법정 의무계획으로서 새로이 수립될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앞서 기술한 국내외 식품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동시에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식품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상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지원,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의 5대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1개의 세부과제 및 세부과

제에 따른 연구 및 정책들에 대한 정책적 성과와 개선 방안, 새로운 4차 계획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함.

- 구체적으로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식량주권 확보, 신식품 및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혁신성장, 고령친화식품, 간호식품 개발을 비롯한 취약계층과의 포용성장, 환경과의 동반성장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현안을 충실히 반영해야 함.
- 나아가 식품업계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발전을 선도할 식품산업 발전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전후방산업과 동반성장하는 식품산업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함.
 - 인구구조 변화와 식품 절벽, 노동력 부족 대응 정책 방향성 제시 필요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체결을 앞둔 시점에서 농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입 역량 제고
 - 수출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 노력 요구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탄소중립 등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식품 정책 및 전략 제시 필요성 대두
 -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 소비트렌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 마련 필요

1.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식품산업진흥 추진계획을 평가하고, 식품산업 대내외 여건의 변화 및 향후 전망을 기초로 하여 향후 5년간의 식품산업 분야별 주제를 도출하고,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 식품산업진흥법(2022.01.01. 시행)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명시된 사항

-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및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기능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 기타 식품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식품산업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 국제/사회/인구/경제적 여건 변화(환율, 곡물, 원유, 이자율, 경제성장률 등)
- 국내 경영환경 변화와 이슈(물가, 노동력, 투자환경 등)
-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와 전망
- 식품산업 현황 분석

-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운영성과 점검 및 평가
 - 제1차, 제2차, 제3차 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동사항
 -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추진체계 평가
 -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성과 평가(기여와 한계, 원인 분석)

- 주요국의 식품산업 정책 동향
 - 미국, 일본, 유럽의 식품산업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방향과 추진체계
 - 기본 방향, 비전 및 정책목표, 추진체계

-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 세부 분야별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투융자 소요 예산 추정 등 포함)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등 포함)
 - 전통식품산업 진흥

-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관련(기능성이 확인된 식품 포함 신식품산업 활성화)
 -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한 진흥(식품의 품질향상 및 표시/인증제도 관련)
 - 식품산업 관련 R&D 및 혁신 관련
 -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식품산업 관련 통계·빅데이터·정보화 관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목적, 운영 및 개선사항 관련
 - 식품산업의 ESG 관련

〈표 1-1〉 개정 식품산업진흥법(2022.01.01. 시행) 제4조 기본계획 관련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기본계획 포함사항	본 연구의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세부 분야별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투융자 소요 예산 추정 등 포함)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등 포함)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
3의 2.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전통식품산업 진흥
3의 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관련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 포함 신식품산업 활성화)
4.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관련 -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 포함 신식품산업 활성화 -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한 진흥 - 식품의 품질향상 및 표시/인증제도 관련 개선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 관련 R&D 및 혁신 관련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식품산업 관련 통계·빅데이터·정보화 관련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등 포함)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한 진흥 (식품의 품질향상 및 표시/인증제도 관련)
8의 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목적, 운영 및 개선사항 관련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식품산업의 ESG 관련

자료: 「식품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 연구범위

- 광의의 식품산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2022.07.05. 시행)」 제3조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인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함. 협의의 식품산업은 광의의 식품산업에서 유통업을 제외한 식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과 외식업을 의미함.
- 식품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식품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외식, 김치, 전통주, 한식이 별도의 진흥법에 의거하여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식품산업진흥법(2022.12.11. 시행)」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주요 사업 범위를 설정함. 즉, 식품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되, 외식, 김치, 전통주, 한식 산업의 주요 정책을 포함함.

-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 및 통계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 1월(1분기)부터 2022년 3월(1분기)로 한정함.
- 본 연구 결과 수립될 「제 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 연도의 식품산업 전망을 시간적 범위로 함.

2.3. 연구방법

- 식품산업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 기초통계분석
 -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문헌 연구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전망 도출을 위한 다양한 경제학적 기법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조사(향후 전망 관련)
-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운영성과 점검 및 평가
 - 타 기본계획 평가방법 검토 및 참고
 - 농식품부 추진 실적 관련 자료 협조 및 정책 담당자 인터뷰(「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추진 실적 검토 및 평가 관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조사(추진체계 및 운영성과 평가 관련)
 - 식품제조업체 조사 및 분석(인지도, 만족도 등 성과 평가 관련)
- 주요국의 식품산업 정책 동향
 -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 연구
 - 해당 국가 전문가 활용 원고위탁(필요한 경우)

○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방향과 추진체계 구축

-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잠정안 제시
-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및 식품제조업체 조사

○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도출

- 분야별 전문가 그룹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및 식품제조업체 조사를 통해 과제 추진방안 구체화
 - ※ 농식품부에서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대상 연간/분기 통계에서 함께 조사 진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협조 필요

3. 선행연구 검토

3.1. 국내외 식품정책 관련 선행 연구

〈표 1-2〉 선행연구 키워드 정리

분야	저자	주요 키워드
1. 식품산업 진흥 기본 방향	최지현 외(2009)	산업구조, 농업연계, 영세 사업장, 국내 농산물
	최지현 외(2010)	가공산업, 생산비, 재배 단지, 계약재배
	최지현 외(2011)	계약재배, R&D, 한식 세계화, 육가공 제품
	최지현 외(2012)	외식, 국산 식재료, 직거래, 공동구매, 산지유통조직, 전처리
	최지현 외(2013)	산업연관, 연구개발, 해외 판촉, 지역전략식품산업, 전통식품산업
	황의식 외(2014)	영세 산업구조, 연계 강화, 수출 확대
	이용선 외(2016)	식품산업 육성, 국산 농산물, 유통구조, 로컬푸드, 친환경 축산체계
	김종안 외(2017)	푸드시스템, 먹거리 실태, 식품 정책, 푸드플랜, 거버넌스
	김홍상 외(2017)	농발계획, 안전망, 지속가능성, 먹거리, 복지농촌, 참여, 협력
	최지현 외(2017)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혁신역량, 신성장, 부가가치
	농어촌연구원(201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추진실태 평가 및 개선 방향 연구”
	김상효 외(2020)	식품 정책, 식품제조업, 포용성장, 지속가능성
문한필 외(2020)	수산식품산업, 혁신역량, 융복합, 소비기반 확대, 상생협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방안 관련	김관수 외(2012)	연계 강화, 국내산 원료, 가격등락, 김치업체
	박재홍·최지현(2015)	부가가치 제고, 국내산 원료, 계약재배, 원산지 표시

분야	저자	주요 키워드
	김병률(2016)	식품가공산업, 품종개발, 원산지 비율, 연계 강화
	이계임 외(2018)	농업연계, 농식품 바우처, 공공지원, 저소득층, 식품지원제도
	강민정 외(2019)	식품소비, 농가수취율, 산업연관표, 식품산업구조
	김상호 외(2019a)	신선편이 식품, 계약재배, 소비트렌드, 후방산업
	김상호 외(2019b)	농식품 바우처, 추진체계, 농업연계, 공공지원
	김종안 외(2020a)	식품산업, 원료조달, 국산 농산물, 생산여건, 소비트렌드
	김상호 외(2021a)	농업연계, 농식품 지원제도, 공공지원, 취약계층
	김상호 외(2021b)	공공지원, 농업연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3. 식품 수급·유통·수출 관련	채중훈(2010)	경쟁력확보, 파급효과, 장기 수출지원, 수출보험제도
	박기환 외(2013)	수출진흥, 다변화, 수출전용단지, 가공식품, 시장 세분화
	김경필 외(2017)	농식품 수출시장, 진출 여건, 구입 의향, 베트남 시장, UAE 시장
	조성주 외(2018)	농식품 수출, 수출기업, 수출 결정요인, 수출 지속성
	송영관 외(2019)	대외경제, 식품제조업, 푸드테크, 대체식품, 조제식품, 할당관세
	황윤재 외(2019)	식재료 유통, 급식 실태, 식품지원제도, 유통체계
	글로벌융합경영(주) (2019)*	“지역특화농식품 중화권시장 수출 핵심요인 분석 및 경쟁력조사”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2020)*	“한국 농식품 신북방지역 진출방안 조사용역”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2021)*	“농식품 수입대체 유망 전략품목 활용을 위한 심층조사 및 분석”	
홍연아 외(2022 발간예정)	농식품 폐기, 농식품 유통, 음식물 쓰레기, 예방책	
4. 식품산업 기술 개발·미래 산업 및 전망 관련	홍석인 외(2009)	녹색성장, 고부가가치, 전통발효식품, 식품안정성
	박은우 외(2012)	식품산업 R&D, 지원체계 개선, 조사체계, 성과지표, 정보유통시스템
	이명기·김홍상(2015)	농산업경영체, 식품 R&D, 농식품 모태펀드, 민간투자, 창업
	김상호 외(2017)	고령친화식품, 시장 인프라, 수요 창출, 기업 생태계, 복지제도
	박준기 외(2017)	농식품모태펀드, 부가가치, 신성장동력, 투자 활성화
	(사)할랄협회(2017)*	“할랄 농식품산업 육성정책 방안 연구”
	김성훈 외(2018)	푸드테크, 푸드 스타트업, 맞춤형 정책, 자생적 발전, 농식품 정책
	김지연 외(2018)	건강기능식품, 신고·표시제, 신선 농산물
	안병일(2018)	건강기능식품, 규제, 분류체계, 관련 업체 조사
	양윤경 외(2018)	고령 친화형 식품, 인증제, 개호식품, 표준, R&D 투자
	이기원·김서영(2018)	미래기술, 먹거리 산업, 소비자 기준, 데이터 기반, 융합연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2018)*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를 포함한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방안 연구용역”
	김지연 외(2019)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소분, 영양서비스, 건강
	박미성 외(2019)	푸드테크, 3D 프린팅, 원천 기술, 금융인프라, R&D 투자
	(유)이지엔티엔씨(2019)*	“식품분야 10대 유망기술 도출 연구”
	최종화 외(2020)	포스트 코로나, 미래 예측, 미래 워크숍 분석, 먹거리 분야, 대체식품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2020)*	“농식품 R&D 투자전략 수립 연구용역”
	박미성 외(2021)	미래유망기술, 대체식품, 고령친화식품, 식품공정·가공기술, 사회·경제적 효과
	정세영 외(2021)	메디컬푸드, 관리체계, 의료용식품, 제도 분석, 의료용식품법률안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21)*	“대체단백질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획연구”
홍연아 외(2021)	신성장산업, 반려동물, 규제혁신	
김상호 외(2022)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화 소비자 측면, 생산자 측면, 활성화 전략	

분야	저자	주요 키워드
5.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관련	노용식(2015)	고용, 일자리, 공간적 균집, 입지, 보조금, 식품산업클러스터
	2017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보고서(2017)	식품 전공, 생산직, 기능직, 고용안정, 연구개발, 전문대학
	서홍석 외(2017)	농림식품 및 관련산업, 종사자 수, 부가가치, 분류체계
6.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관련	국승용 외(2011)	천안시, 도농균형, 향토식품자원, 로컬푸드, 과실주, 호두
	박민규(2012)	대구지역, 재정지원, 마케팅 홍보, 인력양성, 힐링푸드
	양승룡 외(2018)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소비자 인식, 가공식품시장, 인증제
	김종안 외(2019)	푸드플랜, 로컬푸드, 먹거리, 지속가능, 거버넌스, 직거래
	정은미 외(2021)	로컬푸드, 푸드플랜, 먹거리시민양성, 지역먹거리, 직매장
	황윤재 외(2021a)	로컬푸드, 지역 푸드플랜, 도농복합형, 농촌형, 파급효과
7. 식품안전·정보화 및 통계·분류 체계 관련	김상호 외(2018)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도 제고, 의무표시, 농식품 인증표시
	류상모·김진우(2018)	농림식품 관련산업, 부가가치, 지표화, 신성장산업, 분류기준
	김한호 외(2019)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 농산물, 축산물, 법적 개선, 조직 개선
	안동환 외(2019)	농림식품 분류체계, 통계기반 구축, 부가가치, 산업연관분석
	이주형 외(2019)	식품안전관리, 산업진흥, 살충제 달걀, 식품안전 규제, 품질관리
	권세혁(2020)	농식품 산업통계, 산업특수분류, 분류체계, 산업연관
	박미성 외(2020)	식품산업 변화, 식품통계, 통계 재정비, 이용자 중심, 통계분류체계, 민관거버넌스체계
8. 국가식품 클러스터 관련	이주형 외(2020)	식품이력추적제, 블록체인, 원료단계, 수출단계, 산업체 지원
	김성준 외(2021)	데이터 3법, 농식품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농업인 정보
	이항구 외(2008)*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 품질관리, R&D, 산학연 협력
	김경필 외(2013)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 농산물 원료, 상생 연계방안
	한국생산성본부(2019)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운영체계 효율화, 자립화, 성과관리
	최병욱 외(2021)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성과, 토지이용, 입주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9.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관련	DEFRA(2006)	Food Industry, Well-Being, Carbon Emission, Innovation
	Food Drink Europe(2012)	Sustainable sourcing, Resource Efficiency, Packaging
	임정민 외(2012)	상생발전 전략, 식품제조업, 유통업체, 클러스터, 중소기업 지원
	Baldwin(2015)	Sustainability, Environment, Welfare, Energy, Food Waste
	FAO(2017)	Food System, Eco-Friendly, Fossil Fuel, Partnership
	Unnevehr(2017)	Food and Beverage Industry, Economic Footprint, Contribution
	이명기 외(2017)	OECD 정책분석틀, 혁신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이용선 외(2018)	중소 식품기업, 안정성장, 과잉경쟁, 기업 간 협력
	김상호 외(2020)	포용성장, 지속가능성, 안정성장, 공정 기회, 공평 분배
	정학균 외(2020)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유기농업
	김종안 외(2020b)	기후변화 대응, 순환체계, 저탄소, RE100
	황윤재 외(2021b)	지속가능성,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 정책 수요, 정상 회의

주: (*)표시된 연구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보고서에 해당함.

자료: 저자 작성

2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식품산업 현황

1.1. 국내 식품시장 규모와 성장

1.1.1. 식품산업 매출액 및 GDP

○ 식품제조업, 외식업, 유통업을 포함한 광의의 식품산업 매출액은 2010년 239.8조 원에서 2015년 463.6조 원, 2020년 569.9조 원으로 10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부문별로는 식품 유통업이 12.0%로 가장 높아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의 연평균 6.5% 수준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함. 식품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5.4%로 광의의 식품산업 범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같은 기간 일반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 2.2%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¹⁾

¹⁾ 일반제조업 매출액은 2010 1,464조 원에서 2020년 1,816조 원으로 연평균 2.2%로 성장

〈표 2-1〉 식품산업 매출액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	연평균 성장률		
								2010 ~ 2015	2015 ~ 2020	2010 ~ 2020
광의의 식품산업 (A+B+C)	239,796 (100.0)	463,594 (100.0)	471,912 (100.0)	498,464 (100.0)	521,333 (100.0)	535,526 (100.0)	569,873 (100.0)	14.1	4.2	9.0
협의의 식품산업 (A+B)	141,897 (59.2)	209,900 (45.3)	227,414 (48.2)	242,410 (48.6)	260,315 (49.9)	270,854 (50.6)	265,775 (46.6)	8.1	4.8	6.5
음식료품 제조업 (A)	74,352 (31.0)	101,887 (22.0)	108,561 (23.0)	114,111 (22.9)	122,132 (23.4)	126,462 (23.6)	125,886 (22.1)	6.5	4.3	5.4
- 식품료품제조업	66,304 (27.7)	90,626 (19.5)	97,053 (20.6)	102,233 (20.5)	109,687 (21.0)	114,054 (21.3)	113,455 (19.9)	6.4	4.6	5.5
- 음료제조업	8,048 (3.4)	11,260 (2.4)	11,508 (2.4)	11,878 (2.4)	12,444 (2.4)	12,408 (2.3)	12,431 (2.2)	6.9	2.0	4.4
음식점업 (B)	67,566 (28.2)	108,013 (23.3)	118,853 (25.2)	128,300 (25.7)	138,183 (26.5)	144,392 (27.0)	139,890 (24.5)	9.8	5.3	7.5
식품 유통업 (C)	97,899 (40.8)	231,797 (50.0)	244,498 (51.8)	256,054 (51.4)	261,018 (50.1)	264,673 (49.4)	304,098 (53.4)	18.8	5.6	12.0
- 음식료품 도매업	85,387 (35.6)	135,542 (29.2)	143,466 (30.4)	150,705 (30.2)	151,474 (29.1)	153,250 (28.6)	182,683 (32.1)	9.7	6.2	7.9
- 식품 소매업	12,512 (5.2)	96,255 (20.8)	101,032 (21.4)	105,349 (21.1)	109,544 (21.0)	111,423 (20.8)	121,415 (21.3)	50.4	4.8	25.5

주1: 통계청 연도별 경제총조사(2010, 2015, 2020),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매판계통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등을 활용하여 작성

주2: 음식료품 도매업, 식품 소매업 매출액은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담배를 제외한 값임.

주3: 음식점업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식점업을 포함함.

주4: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자료는 등록기반 자료와 조사기반 자료로 나뉘며, 본 연구에서는 등록기반 자료를 활용함.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2010, 2015),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통계청, 서비스업조사(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전체 식품산업에서 차지하는 음식료품 제조업의 매출액 비중은 2015년 이후 22~23% 대에 정체되어 있음.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2020년 매출액 비중이 24.5%로 감소함. 반면에 2015년 이후 식품유통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2019년을 제외하면 50%를 초과함.

○ 협의의 식품산업 GDP는 ('16) 190.7조 원에서 ('20)198.0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식품제조업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명목 GDP 비중은 1.2%~1.3%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명목 GDP 비중은 2021년 1.9%로 감소함.

1.1.2. 식품제조업 출하 및 물가

- 1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시작 연도인 2008년부터 차수별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종료 기간을 기준으로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출하지수 추이를 분석함. 식료품제조업 출하지수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한 증가 경향을 보임. 반면에 음료제조업의 출하지수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106.1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기간별 성장세 측면에서 2차 진흥계획 추진 기간을 제외하면 식품제조업 출하지수의 우위가 발견됨.
- 음식료품 제조업의 재고지수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식료품제조업의 재고지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4.5 p 증가하였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평균 3.0 p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완화됨. 3차 진흥계획 추진 기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평균 7.1 p 증가함. 음료제조업의 재고지수는 동 기간 각각 -2.0 p, 6.4 p, 7.1 p 증가함. 재고지수의 증가는 식품제조업체의 리스크 증가로 해석할 수 있고, 물가 급등과 더불어 식품제조업체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식품산업에서 직면하는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2013~2015년을 제외하면 신선식품(농·축·수산물) 물가가 가공식품(식료품·음료) 물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신선식품 생산자물가지수의 연도별 증가폭이 큰 것과 대조적으로 가공식품생산자물가지수는 안정세를 보여 2015년 이후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생산자물가의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임. 신선식품 물가 급등이 지속된다면 신선식품 원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경영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

1.1.3. 식품산업 경영실적

- 2010년 33.9조 원이었던 광의의 식품산업 영업이익은 2015년 34.2조 원, 2020년 33.6조 원으로 정체 중임. 협의의 식품산업(식품제조업+음료제조업+외식업)이 전체 식품산업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78.4%에서 2020년 62.0%로 감소함.

- 2021년 식료품 제조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각각 3.8%, 3.3%, 음료 제조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매출액은 10.7%,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4.9%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연도 변화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음료제조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음료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함.
- 음식료품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식료품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대비 2020년 5.8% p 감소하였고, 음료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10.2%에서 2020년 25.1%로 6.5% p 증가함. 2010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과실, 채소 가공업으로 해당 기간 영업이익률 약 9.8% p 감소함. 음료 제조업의 경우, 알코올음료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30%를 상회하며 꾸준히 높은 특징을 보임.
- 중소식료품제조업체의 성장성 지표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매출액증가율 측면에서 대기업은 2010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연평균 0.4% p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0년 9.0%에서 연평균 0.6% p 증가하여 2021년 16.0%를 달성함. 대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2010년 10.5%에서 2021년 3.7%로 연평균 0.6% p 감소함. 반면에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동 기간 0.7% p 증가하여 2010년 8.8%에서 2021년 16.6%로 나타남. 단,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총자산, 유형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자기자본 등 성장성 지표 전반에서 이미 충분히 성장하였고, 중소기업은 성장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장성 지표의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음.
- 음료제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매출액 및 총자산 증가율 지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대기업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변화분은 0.5%

p인 반면 중소기업은 0.6% p로, 2021년 수치를 비교하면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4%, 중소기업 매출액증가율은 15.0%임. 대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2010년 14.0%에서 2021년 4.6%로 연평균 0.8% p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010년 5.9%에서 2021년 13.1%로 연평균 0.7% p 증가함.

1.2. 식품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1.2.1. 식품산업 사업체 수

○ 광의의 식품산업 사업체 수는 2010년 788,334개 사에서 2020년 970,732개 사로 연평균 2.1% 증가함. 동 기간 협의의 식품산업(음식료품 제조업+외식업) 사업체 수의 비중은 81.3%에서 81.6%로 소폭 증가하였음. 그러나 음식료품 제조업이 광의의 식품산업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9%에서 2020년 6.6%로 감소하고 음식점업 사업체 수가 74.4%에서 74.9%로 증가하여 제조업체 수의 감소가 발견됨.

○ 식품산업 연도별 인허가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광의의 식품산업 인허가 건수는 감소하였고(132,654 건 → 128,094 건) 폐업 건수는 증가(61,976 건 → 79,484 건)하여 연평균 순증가 증감률이 -7.2%로 분석됨. 2020년 식품산업 인허가 건수는 203,286 건으로 2015년부터 연평균 9.7%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같은 기간 연평균 12.5%의 폐업율에도 불구하고 순증가 증감률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4%로 분석됨.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외식업 인허가 건수가 이전 기간(2015~2020)의 10.1%에서 크게 감소하여 -1.6%로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온라인 시장 활성화를 배경으로 유통업체는 2020~2022년간 연평균 14.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식품제조업은 인허가 업체수 연평균 증감률이 2020~2022년간 -9.3%로 이전 기간(2015~2020년간 -3.6%)에서 크게 감소함에 따라 폐업업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체수가 연평균 13.9%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1.2.2. 식품산업 종사자 수 및 고용

- 광의의 식품산업 종사자 수는 2010년 2,272,027 명에서 2015년 2,765,448 명, 2020년 3,079,034 명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1%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가 광의의 식품산업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서 12.1%로 감소하였고, 동 기간 음식점업의 비중이 70.8%에서 71.2%로 증가하였음.
-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식품산업 종사자 수 동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식품산업 종사자 수는 12년간 연평균 2.7% 규모로 증가하였고,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 수는 연평균 2.6% 수준으로 증가함. 외식업과 유통업 부문에서는 12년간 2.8%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음. 그러나, 음식료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 증감률은 3차 진흥계획 기간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음료제조업의 경우 3차 진흥계획 기간 -0.9%의 연평균 종사자 수 증감률을 기록하는 등 음식료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 증가세는 둔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취업자 수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 음식료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함. 상용근로자 비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식품제조업에서 상용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됨.
- 식품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체 제조업에 비해 인력 부족률이 높는데²⁾, 식품산업 내에서 직종별로는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에 비해 생산직의 인력 부족률이 높게 나타남.

1.2.3. 식품산업 교육기관

- 식품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현황을 보면, 2019년 이후 학과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자 수와 졸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음.

²⁾ 22년 하반기 기준 전체 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은 4.2%, 식료품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은 5.7%임.

○ 교육통계서비스에서 통계 항목으로 제공하는 학과 중, 식품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식품영양학과 농림수산업의 총 학과 수를 살펴보면 식품영양학과와 관련한 학과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졸업자 수는 2020년 8,550명을 달성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1.3. 식품제조업 비용구조 및 원재료 사용 동향

1.3.1. 식품제조업 비용구조 동향

○ 음료식품제조업의 영업비용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0.6% 증가했으며, 식료품제조업이 동 기간 연평균 6.2%, 음료제조업이 3.6% 증가하여 음료식품제조업의 비용 상승이 음료제조업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됨. 최근 5개년 연평균증감률을 기준으로는 식료품제조업은 5.1%, 음료제조업은 2.6% 증가하였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외식업은 연평균 9.8%, 식품유통업은 연평균 8.4%씩 영업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2-2〉 식품산업 영업비용 구성 요소별 추이 및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십억 원, %

구분	영업비용			연평균 증감률			
	2010	2015	2020	10-'15	'15-'20	10-'20	
전체 영업비용	광의의 식품산업 (A+B+C)	205,955 (100.0)	332,007 (100.0)	448,370 (100.0)	10.0	6.2	8.1
	협의의 식품산업 (A+B)	115,310 (56.0)	182,715 (55.0)	244,967 (54.6)	9.6	6.0	7.8
	음식료품 제조업 (A)	63,286 (30.7)	89,261 (26.9)	113,057 (25.2)	7.1	4.8	6.0
	- 식료품제조업	56,736 (27.5)	81,058 (24.4)	103,745 (23.1)	7.4	5.1	6.2
	- 음료제조업	6,550 (3.2)	8,203 (2.5)	9,312 (2.1)	4.6	2.6	3.6
	음식점업 (B)	52,024 (25.3)	93,455 (28.1)	131,910 (29.4)	12.4	7.1	9.8
	식품 유통업 (C)	90,644 (44.0)	149,292 (45.0)	203,403 (45.4)	10.5	6.4	8.4
	- 음식료품 도매업	80,549 (39.1)	130,726 (39.4)	172,783 (38.5)	10.2	5.7	7.9
	- 식품 소매업	10,096 (4.9)	18,565 (5.6)	30,619 (6.8)	13.0	10.5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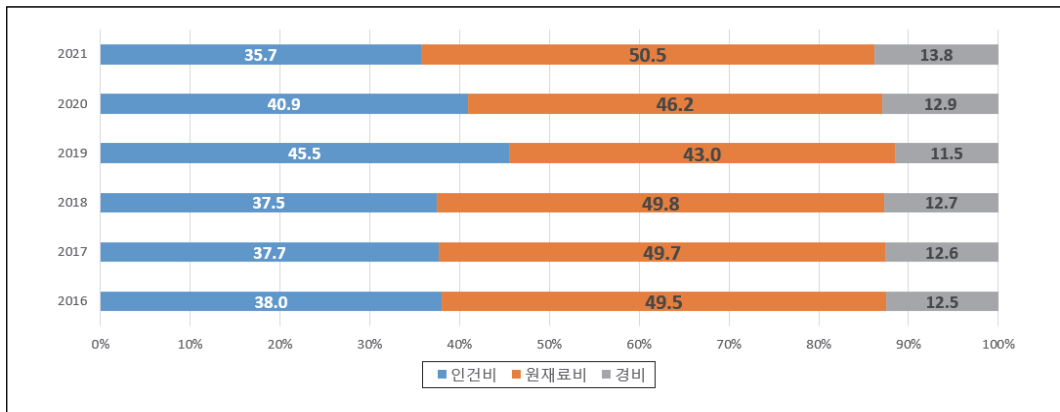
주1: 괄호 안은 광의의 식품산업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각 연도)

○ 식품제조업의 비용구조는 원재료비 비중이 절반 정도의 높은 비중을 점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2021년 식품산업 인건비 비중은 35.7%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원재료비 비중은 50.5%로 증가하는 추세임.

○ 식품제조업의 2020년 이후 원재료비 상승에는 코로나 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남미 작황 악화가 영향을 미쳤으며, 국내 농산물 물가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됨. 2022년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이후 원재료 비중은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그림 2-1〉 식품제조업 평균 비용구조



자료: KED 한국 기업평가 데이터

1.3.2. 원재료 사용 동향

○ 식품제조업에서의 국산 원료 사용량은 2012년 448만 톤에서 2020년 592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동 기간 29.8%에서 31.9%로 증가함.

〈표 2-3〉 식품산업 국산 원료 사용량 추이

단위: 만 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원료 사용량	1,504	1,508	1,565	1,634	1,651	1,715	1,787	1,858	1,855
국산 원료 사용량	448	470	489	515	519	538	560	585	592
비중(%)	29.8	31.2	31.2	31.5	31.4	31.4	31.3	31.5	31.9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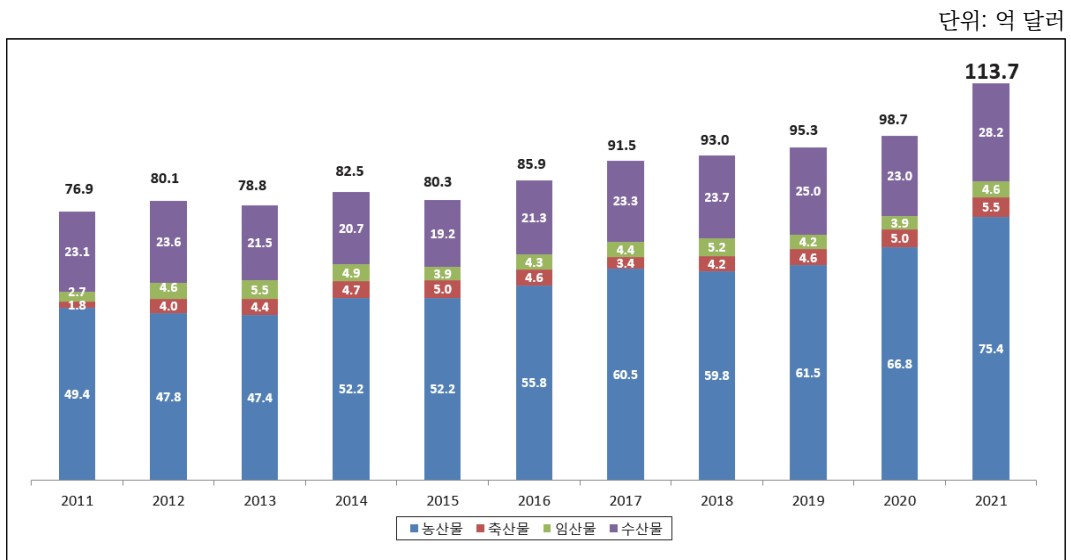
○ 식품산업의 주요 원료의 국내산 이용률은 낮은 수준임. 쌀의 경우 자급률이 100%에 이르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 원재료 비중은 64.3%에 불과함. 사용량이 높은 옥수수, 대두, 주정의 국산 원재료 이용률은 2020년 기준 각각 0.1%, 6.2%, 15.3%에 그치고 있음. 특히, 국내에서 쌀을 대체하여 새로운 주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맥(밀) 및 소맥분(밀가루)의 국산 원료 이용 비중은 2016년 0.96%에서 2020년 0.09%로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1.4. 식품산업 수출

1.4.1. 국내 농식품 수출현황

○ 국내 농식품 수출 및 수출액은 2011년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1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함. 수산물을 제외한 농축임산물 수출액은 2021년 85.5억 달러임.

〈그림 2-2〉 농림수산물 부류별 수출금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

1.4.2. 주요 국가 수출 현황

- 최근 7년간 수출 상위 5개국은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이며, 떠오르는 시장인 아랍에미리트의 수출 순위가 내려감.
- 미국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019년 기준 780백만 달러로, 수입량 중 0.5%에 불과하나 연평균 증감률은 4.6%로 전체 국가 연평균 농식품 수입액 증감률 2.8% 대비 높은 수준임. 미국 유통의 98%는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대식 유통 채널 비중은 88.5%에 달하여 슈퍼마켓(45.7%) 및 하이퍼마켓(28.5%)를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의 경우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019년 기준 126백만 달러로, 수입량 중 0.4%에 불과함. 연평균 증감률은 -4.0%로 저조함. 캐나다에서는 식품의 99.6%가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며, 현대식 유통채널 비중은 63.7% 수준임.
- 유럽연합 주요국가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프랑스에서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금액은 2019년 33.9백만 달러에 불과함.
- 신북방국가(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13개 국가) 중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은 소득증대, 한류의 영향 등 한국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하며, 현대적 유통채널이 구축되고 있음. 한국 농식품은 주로 가공도가 낮은 라면, 음료, 커피 등이 수출되고 있으나, 향후 과자류, 두부류, 소스류 등 수출 품목 확대 가능성이 존재함(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 농식품 신북방시장 진출 가이드).
- 식품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은 주로 동남아시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시장에 집중하는 추세로, 식품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 중 대다수가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판매 촉진 노력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한류 콘텐츠의 유행과 식품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K-Food 수출 활성화의 기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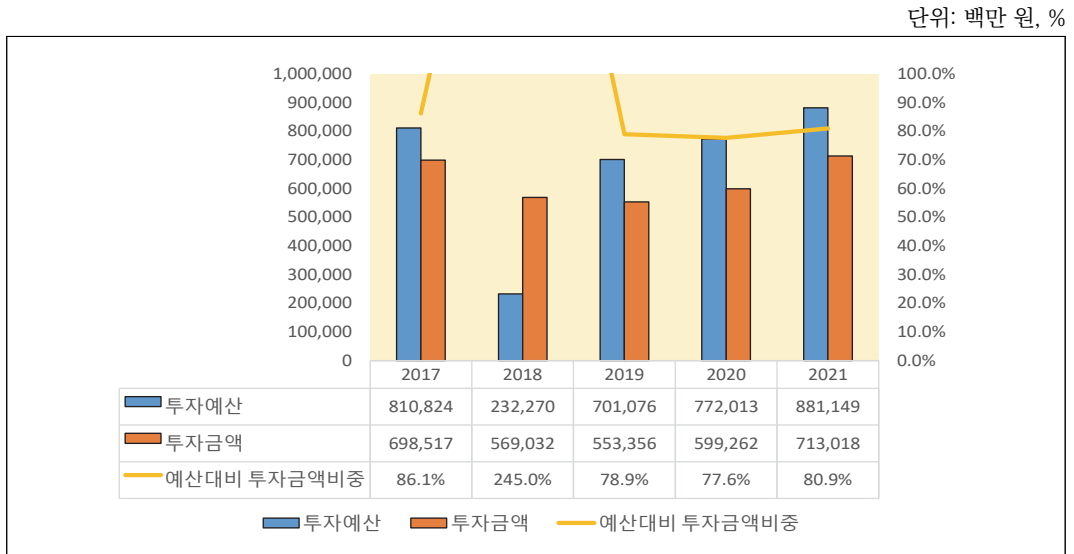
1.5. 식품산업 R&D, 클러스터 및 통계

1.5.1. 식품산업 R&D

가. 공공 R&D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Fris에 따르면, 연도별 R&D 투자금액은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대비 투자 금액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80.9% 수준임.

〈그림 2-3〉 농림축산식품분야 R&D 추이



자료: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

나. 민간 R&D

○ 민간 R&D는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식품기업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공개 자료의 부족으로 통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2020년 기준 식품기업 중 독자적으로 R&D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36.3%로 전체 기업의 독자수행 R&D 활동 비중인 39.3%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음료제조기업의 경우 40.2%의 기업이 독자적 R&D를 수행함.

○ 식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에서는 공동으로 R&D를 수행하지 않는 편으로 분석됨. 전체 기업의 5.6%가 공동수행 R&D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식료품 제조업은 0.8%, 음료 제조업은 0%의 공동 수행 R&D 추진률을 보임.

다. 푸드테크 관련 R&D 추진현황

○ 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기간 추진된 푸드테크 관련 R&D는 총 108건으로, 가정간편식 관련 연구 27건, 기능성식품 관련 연구 44건, 고령친화식품 관련 연구 14건 식품포장 관련 14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연구 9건임. 미래유망식품 R&D 과제 건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푸드테크 관련 배양육, 식물성 대체육 등 R&D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연도별 과제금액을 살펴보면 기능성식품, 가정간편식의 경우 증가 추세, 고령친화식품은 2021년 집중 투자, 마이크로바이옴은 2021년 신규 투자 확대, 식품 포장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임.

〈표 2-4〉 시작연도별 분야별 미래유망식품 R&D 과제 건수 및 기간, 금액

단위: 건, 백 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연구기간
과제 건수	가정간편식(HMR)	7	12	0	5	3	24	2.70
	고령친화식품	0	7	2	5	0	14	2.79
	기능성식품	7	13	5	12	7	37	2.91
	마이크로바이옴	1	3	0	5	0	9	3.89
	식품포장	4	0	0	6	4	10	3.00
	합계	19	35	7	33	14	-	-
과제 금액	가정간편식(HMR)	673	434	-	1,038	1,103	2,145	-
	고령친화식품	-	429	614	1,154	-	2,197	-
	기능성식품	802	408	564	1,429	1,012	3,203	-
	마이크로바이옴	2,519	326	-	2,825	-	5,670	-
	식품포장	949	-	-	1,304	693	2,253	-
	합계	19	35	7	33	14	-	-
평균 연구 기간		3	2.43	2	3.55	3.14	-	2.9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국내 식물기반 대체식품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2017년 319백만 원에서 2020년 747백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규모면에서는 배양육이나 식물곤충과 같은 다른 대체육의 투자 규모에 미치지 못함.
- 식물성대체식품의 연구수행주체별 수행비율을 보면 대학이 66%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2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식물성대체식품의 연구단계별 수행 비중을 보면 개발연구가 74%로 가장 많고, 응용연구(22%), 기초연구(4%) 순으로 나타나 기초연구 지원이 매우 미흡함.
-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업 규모와 기술별 수준 측면에서도 한국은 온라인 주문 배달을 제외하고 미국, 영국 등 푸드테크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게 나타남.³⁾ 향후 대체식품, 식품 개인화, 친환경 패키징, 생물학적 보존법 등 미흡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표 2-5〉 대체육 국내 정부 R&D 투자 규모

단위: 백 만원, 개

분야	정부연구비				
	2016	2017	2018	2019	2020
배양육	-	-	282	570	1,532
식물성식품	-	319	450	774	747
식용곤충	1,280	3,049	3,636	3,542	2,292
과제 수	19	39	45	53	39

자료: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대체육, 2021

1.5.2. 국가식품클러스터

가. 개요 및 분양현황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차, 2차, 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로,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도약을 지향점으로 삼아 식품기업·연구기관·연관업체 등을 집적화하고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의 한국형 식품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추진됨.

³⁾ 다만, 이 자료는 스타트업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된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존재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용지, 복합 및 기업지원 시설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기반 시설용지로 구성됨. 총면적 2,321,929㎡ 중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205,929㎡ 로, 중소기업외국인 지정면적이 116,000㎡를 차지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5년 6개사에서 시작하여 2020년 기준 96개 기업, 2021년 12월 기준 114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97만㎡) 및 65.2% 분양이 완료됨. 2020년 11월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제1차 종합계획 목표 대비 선도기업과 중견기업의 유치율은 각각 13.3%, 8.2%이며 소기업 위주로 기업 유치가 진행됨. 따라서 선도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유치노력 제고가 필요함(기업규모별 유치 현황: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87개사).
- 국가식품클러스터 제1차 종합계획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유발인구를 산업단지 종사자 10,155명, 종사자 가족 9,140명으로 직접 유발인구 19,295명과 간접 유발인구 17,944명으로 계획하여 총 유발인구 37,239명을 목표로 함. 그러나, 2019년 산업단지 종사자 수 분석 결과 전체 종사자 수는 733명으로 계획 근로자수 10,155명 대비 달성률이 7.2%로 매우 낮은 수준임.

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생산실적

- (매출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생산실적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기준 4,270백만 원에서 2019년 83,910백만 원으로 약 1865.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2019년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생산실적은 가동 기업 전체매출의 19.4%이고 분양기업 전체 매출액의 12.9% 수준임. 국가식품클러스터 생산이 가동기업과 분양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낮아 기업 생산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국가식품클러스터 제1차 종합계획의 2020년 매출액 목표 15조 원 대비 2019년 산업단지 생산실적 83,910백만 원은 5.6%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입주기업 중 수출기업 수는 2017년 13개사에서 2019년 18개사로 증가하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수출액 분석 결과, 2017년 12,258백만 원에서 2019년 31,958

백만 원으로 약 160.7% 증가하였음. 준공기업의 수출액은 동기간 6,638백만 원에서 23,518백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벤처기업은 5,620백만 원에서 8,439백만 원으로 증가함. 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제1차 종합계획 상 목표 수출액은 2020년 약 3조 원으로, 2019년 산업단지 수출실적 31,958백만 원은 1.1%에 불과한 수준임.

○ (국가식품클러스터 재정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2020년 예산은 41,171백만 원으로 2019년 23,311백만 원 대비 76.6% 증액됨. 주요 요인은 대규모 시설 및 장비 투자로 2016년 및 2020년이 이에 해당됨.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총예산(23,311백만 원)은 국비 91.7%(21,378백만 원), 지방비 예산액 8.3%(1,933백만 원)으로 구성됨.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자체수익은 842백만 원이며, 식품벤처센터 임대료가 60백만 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함. 이는 2019년 예산액 대비 36.1% 수준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현황

〈표 2-6〉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

구분	용도	기능
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업무시설	클러스터조성, 기업유치, 기업지원 및 홍보 등 클러스터(H/W·S/W)의 총괄 관리·운영
② 식품패키징센터	기술지원시설	식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고려한 식품포장의 설계, 제조, 검사 등 지원
③ 식품품질안전센터	기술지원시설	식품기업의 품질안전과 관련된 검사, 자문 등 지원
④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센터	기술지원시설	식품소재의 성분분석, 기능성평가 제공 및 식품개발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⑤ 파일럿플랜트	생산시설	식품기업이 새로운 공정의 도입 및 신제품 출시 전 소규모 시제품 생산시설
⑥ 식품벤처센터	생산시설	식품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식품안전시설 갖춘 생산공간, 부대시설 제공
⑦ 소스산업화센터	생산시설	상품화지원(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애로기술지원 (네트워킹 HUB, R&BD), 정보지원(레시피, 산업정보)
⑧ HMR산업화센터	기술지원시설	가공기술지원(비열살균, 급속냉·해동, 대체육), HMR혁신제품개발지원, 상품성 검증, 포장개발
⑨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	물류·보관	입·출고, 상온창고, 냉장·냉동창고, 야외 창고, 사무실
⑩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기술지원시설 생산시설	제형·제제 기술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생산지원 및 정보지원
⑪ 청년식품창업센터	창업지원시설	식품관련 상품기획부터 시제품제작-테스트-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창업과정을 실습·체험할 수 있는 설비 구축
⑫ 기능성원료은행	기술지원시설	기능성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기능성원료 플랫폼, 기능성 원료 생산, 공급, 기능성식품 테스트플랜트 구축 및 지원, 신규 기능성 원료 개발 및 생산, 공급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https://www.foodpolis.kr/history/history2.php>).

1.5.3. 식품산업의 통계 및 빅데이터

- 식품산업 관련 빅데이터는 유통, 소비트렌드, 기업 재무/비용, 수출입, 웹스크래핑 자료 등이 있음. 유통 분야에서는 유통 가격 데이터, 소매 가격 데이터, 스캐너 데이터(POS, CPS), 신용카드 데이터 등이 있음. 소비트렌드와 관련하여서는 검색어 순위 및 클릭 스트렌드, 어플리케이션 사용시간 데이터, SNS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기업의 재무 관련 자료는 KED, NICE 등에서 수집하고, 수출입 자료는 US COMTRADE 및 무역협회에서 수집·제공하며, HIS Markit 등 민간 기업은 수출입 관련 통찰을 제공하나 접근성이 낮은 한계가 있음.
- 식품산업 관련 통계로는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국민계정, 전국사업체조사, 식품 등의 생산실적, 식품소비행태조사 등 약 30여 개의 통계가 매월 또는 매년 공표되고 있음. 대부분의 통계에 접근할 수 있으나, 통계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식품산업을 전망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함.

1.6. 식품산업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 개념의 도입

- UN은 2015.9월 제70차 UN총회에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고 SDGs17(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7)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구체화함(장명화, 2022).
- 식품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도 가시화 단계임. IPCC(2018)는 식품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비중이 16.1%에 달한다고 분석하였음. 이는 현재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분야인 에너지 다음으로 농식품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 ESG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임(한국거래소, 2021).

- 유럽, 미국 등 우리나라 주요 식품기업 수출국을 중심으로 ESG 관련 규제가 진행되고 있어, 수출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ESG 실천도가 중요해짐.

2. 식품산업 주요 업종별 현황과 문제점

2.1. 식품산업 업종별 현황

- 출하액 기준으로는 간편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미래유망식품과 장류, 조미식품 등이 유망한 것으로 판단됨. 판매액 측면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육류 및 수산가공품, 김치류, 절임류, 과채가공품 등의 성장세가 높았음.
- 국산 원료 이용률 측면에서는 육류, 수산가공품과 김치류, 절임류, 조미식품의 국산 원료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산 원료 이용 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간편식품(즉석조리 식품, 즉석섭취식품 등)으로 분석되었음.
- 가구 지출액 측면에서는 국내에서는 단백질 제품 및 유지류, 간편식품과 김치류, 주류, 조미식품, 육류 가공품 등의 제품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2.2.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높은 업종 현황

2.2.1. 소스산업 및 장류산업

- 소스산업을 포함하는 조미식품 업체 수는 2010년 2,646개 사에서 2021년 5,724개 사로 연평균 8.0% 증가하였음. 장류산업체 수는 2010년 1,325개 사에서 2021년 2,003개 사로 연평균 3.8% 증가하였으나, 2017년 대비 2021년 업체 수는 연평균 0.7% 감소하는 추세임.

- 생산량 및 생산액 지표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소스산업의 생산량은 285천 톤에서 855천 톤으로 연평균 10.5% 성장하였고, 생산액은 동 기간 579,621백만 원에서 2,108,488백만 원으로 연평균 12.5% 성장함. 장류산업의 경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장류산업의 생산량은 637천 톤에서 722천 톤으로 연평균 1.2% 성장하였고, 생산액은 동 기간 702,971백만 원에서 902,744백만 원으로 연평균 2.3% 성장함. 최근 5개년(2017년~2021년)을 기준으로 생산량 연평균 3.9%, 생산액 연평균 5.7% 성장한 유망산업임. 장류 종류별 생산량 및 생산액 비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간장, 고추장, 된장, 기타장류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장류 수출액 규모는 춘장, 고추장, 기타장류, 양조간장, 혼합간장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 판매량 및 판매액 측면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소스산업 판매량은 248천 톤에서 765천 톤으로 연평균 10.8% 성장하였고, 판매액은 동 기간 655,301백만 원에서 2,473,855백만 원으로 연평균 12.9% 성장함. 장류산업의 판매량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554천 톤에서 578천 톤으로 연평균 0.4%의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판매액 측면에서는 동 기간 911,446백만 원에서 1,198,909백만 원으로 연평균 2.5% 성장함.
- 수출입 지표 살펴보면, 2010년 4천 톤에 불과하였던 소스 수출량은 2021년 33천 톤으로 연평균 21.2% 증가하였으며, 최근 5개년 증감률은 33.6%로 매우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수출액 지표 또한 2010년 12,028백만 달러에서 2021년 97,607백만 달러로 연평균 21.0% 성장하였고, 최근 5개년 증감률로 보면 28.0%에 달함. 장류 수출량은 2010년 21천 톤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45천 톤으로 연평균 7.4% 증가함. 수출액은 2010년 29,658백만 달러에서 2021년 85,663백만 달러로 연평균 17.1% 증가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소스산업을 비롯한 소스류 시장의 글로벌 트렌드는 ‘클린 라벨’, ‘양극화 및 프리미엄화’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 ‘요리의 편리함 추구’, ‘건강과 웰빙 추구’로 국가별 소스류 시장 성장 현황도 양호한 수준임(aT, 2021).

2.2.2. 전통주산업

- 2021년 기준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에 해당하는 전통주의 출하액 기준 시장규모는 약 941억 원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1.1%에 해당함. 일반 막걸리 등을 포함한 전통주 등의 시장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13.5%를 차지함.
- 2021년 기준으로 전통주는 주종별로는 탁주, 과실주, 약주, 증류식 소주 등의 생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21년 기준 전통주 면허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수는 1,401개로, 2011년 540개 업체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까지 주로 식당이나 주점 등의 업소에서 주류를 음용하던 문화에서 홈술과 혼술 대표되는 가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술을 찾아서 즐기는 음주 문화로 전환됨. 코로나19 기간에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존 전통주의 주요 소비층이 중장년층이었다면, 최근에는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전통주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전통주의 소비층이 다양해짐.
- 그리고 젊은 청년층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은 소비에만 그치지 않고, 전통주의 양조, 마케팅, 유통, 그리고 플랫폼 등 전통주 관련 산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전세계적인 K-clure와 K-food 열풍으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출량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점과 بوت셀샵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기존 전통주가 가진 오래되고 건강에 좋은 낡은 이미지를 벗고, 최근 젊은층이 찾는 참신하고 새로운 매력적인 술로의 이미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 결국 전통주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됨.
- 최근 전통주 관련 정책들은 전통주와 음식·문화 등과의 연계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전통주를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찾아가는 양조장’과 ‘전통주 갤러리’ 등의 프로그램들과 방송과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전통주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전통주를 홍보함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2.3. 김치산업

- 2020년 기준 국내에 유통된 김치의 총 공급량(상품김치+자가 제조용+수입 김치)은 1,775천 톤 규모로 추정됨. 2020년 기준 생산된 김치 중 수출을 제외한 국내 유통량은 407.7천 톤 규모임.
- 국산 상품 김치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였으나 김치 수출 증가 및 무역수지 흑자 전환 추세임. 이는 중국산 저가 김치의 수입량 증가, 국내산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불안정, 인건비 인상 등의 제조 원가 상승과 외식업 및 가공업의 성장에 따른 수입산 김치의 양 증가 등에 기인함. 김치 수출량은 2000년 30,014톤에서 2020년 39,748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7.0% 늘어난 42,544톤으로 증가세가 이어짐.
- 김치제조업체 규모의 양극화 심화는 두 자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임. 2020년 김치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김치제조업체의 판매액 규모별로는 10억 원 이하가 전체의 58.2% 비중으로 과반 이상임. 김치 판매액이 30억 원 이하인 업체 비중이 83.1%에 달함.
-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치업체 94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김치 생산량이 500톤 미만인 업체 비중이 56.7%로 60%에 육박하고 있으나 비교적 규모가 큰 1,000톤 이상 비중은 22.7% 수준임. 김치제조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5.2%에 달하는 등 소수의 규모가 큰 업체들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규모가 영세한 구조를 보임.

2.2.4. 해외 한식산업

- 해외 한식산업 현황은 향후 한식의 진출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한식진흥원(2021)의 통계자료를 활용함.

- 해외 한식 인지도는 2021년 조사에서 55.9%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해외 현지인들이 한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식에 대한 호감도는 2019년 85.9%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평년 65% 내외의 수준을 보임. 해외 현지의 한식 만족도는 2018년 이후 9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019년부터 설문한 한식 취식의향의 경우 연도에 따라 71.7%~73.7%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2021년 한식당 방문경험은 전년도 조사결과와 67%를 나타냈으며, 이용한 한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87%를 웃돌고 있음.
- 권역 및 연령대, 성별에 따른 한식당 만족도 평가 조사 결과, 젊은 사람일수록, 여성일수록 한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소비자를 기준으로 북중미,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유럽, 동북아시아 순으로 높은 만족도가 보고됨.
- 한식에 대한 이미지는 K-콘텐츠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 2020년 '맵고(32.5%)', '이색적이며(32.4%)', '풍미가 있는(31.4%)' 식품에서 2021년에는 '풍미가 있고(40.4%)', '건강하고(38.7%)', '채소 위주의(38.4%)' 식품으로 변화함.
- 한식 취식 여부는 2021년 70.8%로 전년 대비 5.8%p 증가하였고, 자주 먹는 한식 메뉴는 김치(33.6%), 비빔밥(27.8%), 한국식 치킨(26.9%)에서 한국식 치킨(30.0%), 김치(27.7%), 비빔밥(27.2%)으로 한국식 치킨의 인지도가 상승함.
- 한식 조리 여부는 2020년 65.0%에서 2021년 70.8%로 증가하였으며, 조리 경험이 있는 메뉴는 김치(24.8%), 한국식 치킨(22.4%), 비빔밥(21.7%)에서 한국식 치킨(23.1%), 떡볶이(19.3%), 김치(18.9%)로 변화함.
- 2021년 기준 가장 선호하는 한식 메뉴는 한국식 치킨(16.1%), 김치(11.3%), 비빔밥(10.7%)으로 나타났으며, 비선호 메뉴는 삼계탕(10.5%), 부대찌개(10.1%), 김치(10.1%) 순으로 나타나 김치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한식 간편식에 대한 구매 의사와 한국 주류 섭취 여부를 설문한 결과, 구매 의사가 높은 한식 간편식은 비빔밥(29.0%), 김밥(25.3%), 한국식 치킨(21.8%)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주류를 섭취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해외 소비자 비중은 64.9%에 달하는 등 한식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음.

2.3. 성장 유망 품목 현황

2.3.1. 간편식 산업

- 즉석식품의 국내 생산량 및 판매량은 2020년 코로나19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관련 제품 생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즉석식품의 국내 판매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18년 3,708,069백만 원이었던 총 국내 판매액은 2021년 4,985,850백만 원을 달성하여, 국내 판매액은 총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즉석식품의 생산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즉석식품의 생산액은 2018년 3.6조 원에서 2021년 4.6조 원으로 증가하여, 국내 생산액은 총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즉석식품류 생산능력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즉석식품의 생산능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짐.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식 증가 등의 식생활 변화로 인한 판매량 증가가 즉석식품 투자로 이어졌음을 의미함.
- 네이버 데이터랩의 냉동 간편식 상품 카테고리 클릭량 지수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일시적인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시적인 증가세 이후 클릭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⁴⁾ 클릭량 지수는 기간 내 최고 클릭량을 100으로 하는 지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2)은 즉석식품의 향후 구입빈도 조사결과 평균 84.0%의 응답자가 증가하거나 유지될 것이라고 답함.

2.3.2.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 특수용도식품 시장은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업체 수, 생산량, 생산액, 판매량 및 판매액, 수출량 측면에서 2010년 대비 2021년 높은 연평균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음, 수출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감소하여 해외 시장에서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
-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고령친화식품과 치료용 메디푸드와 같은 특수용도식품의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임. 세계 개인 맞춤형 영양식품의 시장규모는 2021년 104억 달러에서 2030년 380억 달러 규모로 3.8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 수는 2011년 이후 연평균 2.6%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3.9%의 상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건강기능식품 총 매출액은 2011년 1,368,188백만 원 규모에서 2021년 4,032,130백만 원 규모로 연평균 11.4% 성장하였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연평균 15.9%의 성장세를 보임.
- 국내판매액 측면에서는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11.2% 성장하였고, 최근 5개년 15.6%의 성장세를 보임. 수출액 측면에서는 2011년 55,630백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230,632백만 원으로 연평균 15.3% 성장함. 최근 5년 동안에는 21.0%의 성장세를 보임.

2.3.3. 대체식품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89.9억 달러, 2018년 96.2억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169억 원에서 2021년 221억 원, 2025년 271억 원으로 추정되어 연평균 5.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의 유형별 시장규모는 미트볼이 32%로 가장 많고, 버거패티(21.5%), 너겟류(17.8%), 소시지(12.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세계 식물기반 대체식품의 시장규모는 대체식품의 정의에 따라 발표기관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Global Market data(2022)에 의하면 2020년 약 60억 달러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10.1%성장했고, 2025년까지는 11.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두 기관의 발표자료를 종합해 볼 때 2025년 시장규모는 110~1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대륙별 식물성 대체식품의 시장점유율은 유럽 37.4%, 북미 27.3%, 아시아-태평양 22.7%, 기타 12.6% 순으로 선진국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남. 2025년 기준 북미 37.8%, 유럽 33.9%, 아시아·태평양 18.5% 북미시장의 성장세가 클 것으로 전망됨 (aT, 2022).
- 배양육 시장규모에 대한 Statistics(2019)의 전망치는 2019년 23.9백만 달러에서 2026년 39백만 달러로 추정한 반면 Marketand Market(2019)는 2025년 214백만 달러에서 2032년 593백만 달러까지 큰 차이가 있음. 종합해 볼 때 단기적으로 2022~25년 배양육의 세계 시장규모는 20~40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배양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매년 더 많은 배양육 회사가 출현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 (VC)도 배양육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2019년 기준 총 54개의 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미국에 31.5%(17개), 영국·이스라엘·독일에 각 9.3%(5개), 네덜란드·중국·캐나다에 각 5.6%(3개) 분포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체육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음.

3. 식품산업의 당면 문제점

3.1. 식품산업 전반의 문제점

3.1.1. 식품산업 성장 정체

- 광의의 식품산업 매출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4.1% 규모로 성장했으나 2015년 이후 연평균 4.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을 포함한 협의의 식품산업 매출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8.1% 성장하였으나 2015년~2020년 연평균 성장률은 4.8%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2015년~2020년 음식료품 제조업(4.3%), 외식업(5.3%)은 식품유통업(5.6%) 대비 매출액 측면에서 느리게 성장하고 있음.
- 식품산업 내 음식료품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매출액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 음식료품 제조업이 광의의 식품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1.0%에서 2015년 22.0%로 감소하여 2020년 22.1%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외식업의 경우 2010년 28.2%에서 2015년 23.3%, 2020년 24.5%로 식품산업 내 비중이 감소하는 실정임.
- 식품제조업 출하지수 대비 재고지수의 가파른 상승세는 식품제조업의 성장 정체를 설명하는 근거일 수 있음. 코로나19 이후 식품제조업의 출하지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고지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경영 안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2021년 식료품제조업 재고지수는 138.8로 출하지수(109.5) 대비 급증하였고, 음료제조업 재고지수는 144.8로 출하지수 104.8 대비 높음.
- 부가가치 측면에서 국내 식품산업 GDP는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식품산업이 국가 전체 GDP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식품산업 1.3% 수준에 정체된 상황임. 외식산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역성장하였으며 식품산업 부가가치는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전 산업 대비 유통업을 제외한 식품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함.

○ 식품산업 사업체 수와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대비 식료품제조업 내에서 설탕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음료제조업을 제외한 영업이익률은 악화되었고, 코로나19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음료제조업의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는 둔화됨. 신선식품 생산자물가지수가 2021년 135.1를 기록하여 2019년 114.0 대비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2021년 식품제조업 평균 비용구조 내에서 원재료비 비중은 50.5%에 육박하는 상황임. 동시에 폐업률은 높아지고 작업장 안전성 지표는 정체되어 있음. 식품산업 내 성장 둔화 업종의 현황을 진단하고 식품산업 성장동력 확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과업으로 판단됨.

3.1.2. 식품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 어려움

○ 식품산업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 제고와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식품산업 종사자 수는 정체되어 있음. 광의의 식품산업 종사자 수는 2010년 2,272,027명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4.0% 성장하였으나 2015년 이후 연평균 증감률은 2.2%로 성장세가 둔화됨.

○ 2021년 식료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고, 상용근로자 비율은 0.5%p 줄어듦. 이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임. 그 결과 식품산업 가공·생산직 인력 부족률 및 식품공학 기술자와 시험원 등 고급 인력의 부족률이 높아짐.

3.1.3.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부족

○ 농업과의 연계 강화는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동반성장에 있어서 중요함.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2020년 584만 톤으로 2017년 대비 연평균 4% 수준으로 양적 측면에서 성장하였음. 질적 측면에서의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미흡한 수준임. 2013년 이후 식품산업 내 주요 원료의 국내산 이용률은 31~32%대에 정체되어 있음. 사용량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 원유(우유) 및 배추(99.9%)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국산 원재료 사용량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 자급률이 100%에 이르는 국내산 쌀 또한 식품제조업에서 활용되는 비중은 64.3%에 불과함. 사용량이 높은 옥수수, 대두, 주정의 국산 원재료 이용률은 2020년 기준 각각 0.1%, 6.2%, 15.3%에 그치고 있음. 특히, 국내에서 쌀을 대체하는 주식으로 부상한 밀가루의 경우 2016년 자급률이 0.96%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0.09%로 감소한 실정임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에 대한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품산업의 중장기적 과제일 것임.

3.1.4. 식품산업 R&D 및 정보기반 조성 미흡

- 푸드테크의 도입과 식품산업의 디지털화로 농식품 분야 R&D가 갖는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공공 부문에서 R&D 규모가 증가하고 최근 미래유망식품 관련 R&D가 다수 수행되었으나, 고령친화식품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연구는 2022년 추진되지 않았고, 식품포장 관련 R&D 과제 금액은 감소 추세임. 대체육 관련 기초연구의 지원 확대도 필요한 시점임.
- 대한민국의 식품 관련 통계자료는 푸드테크, ESG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제외하면 식품산업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다가오는 푸드테크와 국가 전반의 디지털화 트렌드 속에서 신규 산업, 신규 소비 트렌드를 포착할 수 있는 통계를 집적하고, 분석하고,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재가공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3.1.5. 농식품 수출시장 한계

- 국산 농식품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출 품목의 발굴 및 기존 주요 수출국에 대한 저변 확대가 필요하나 최근 5년간 상위 농식품 수출 상위 4개국은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으로 이들 국가가 2022년 기준 전체 농식품 수출금액의 57.6%를 차지하며,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라면, 김, 참치, 음료, 커피조제품으로 전체 농수산물 수출금액의 24.2%를 차지함.

- 기존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현재 수출을 하고 있지 않으나 K-Food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발굴하여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함.
- 신북방 국가의 경우 한류 문화의 확산과 함께 시장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한류 콘텐츠의 유행과 식품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K-Food 수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3.1.6 국가식품클러스터 가동률 저위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목적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도약을 지향점으로 삼아 식품기업·연구기관·연관업체 등을 집적화하고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의 한국형 식품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데 있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과제는 미래식품산업의 선도, 식품산업 생태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일 것이나, 분양률 및 준공업체 비율 측면에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는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형 식품클러스터로 기능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
- 시급한 문제점은 연구시설 유치를 통한 식품기업·연구기관·연관업체의 집적화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시설 유치가 필요하나, 연구시설 유치 실적 이 저조함. 기업지원센터가 연구시설의 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식품산업에의 푸드테크 도입 등 첨단기술 기반 기업을 유치·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저조한 수익률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2019년 자체 수익은 842백만 원이며, 식품벤처센터 임대료, 진흥원 본관 임대료를 제외하면 시험분석 및 시제품제작(119백만 원), 임가공수수료수입(64백만 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자체 수익의 21.6%에 불과함. 수출기업 수는 2019년 기준 18개 기업, 수출액 규모는 31,958백만 원이나 이는 해당 기업의 클러스터 이외 사업장을 포함한 것으로, 추후 수출 기능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낮은 가동률과 수익률 지표는 향후 준공기업 비중의 증가 및 기업 지원시설의 가동에 따른 신제품의 성장사업화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방향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산업체·연구기관·연관업체의 집적화는 제3차 식품산업 진흥 계획 기간에 달성되지 못하였고, 규모화를 이끌 선도기업 유치 부족은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의 클러스터로 나아가기 전 선결과제이자 제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 기간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일 것임.

3.1.7. 식품기업 ESG 대응 부족

- 향후 기후변화는 기업의 위험(Risk)이자 재무관리 차원에서 잠재적 변수로 여기고 대응 해야 할 것임. 기후변화는 정책 및 법률, 기술, 시장, 평판 등 기업이 직면한 각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를 통해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함.
- 향후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출, 책임투자,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ESG 지표 마련 필요성이 있음. 김상효 외(2020)는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ESG 이행의 주된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으로써 식품 안전, 건강한 식품 공급노력 제고, 식품 폐기 감축, 취약계층 식품 지원 연계, 환경 친화적 포장재 사용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지목함.
- ESG 관련 제도 마련 및 식품제조업체 사회적 책임 평가지표 작성은 정부의 역할일 것이며,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평가지표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 김상효 외(2020)은 기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평가지표는 이행실적 및 위

반사향 관련 감점의 영향이 크지 않음. 사회적 책임이행 위반에 대해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평가지표를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 책임투자를 위한 ESG 기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수출기업 ESG 기준 등 기업유형별 공통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식품산업의 지각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지표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으로, 통일된 규격이 없는 실정으로 통일된 ESG 경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수출 측면에서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ESG 경영 준수 여부는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납품기업에게도 요구될 전망으로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은 수출증대 측면에서도 시급한 문제임. 내수 위주의 영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는 식품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모별 별도의 지표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음.
- 2022년 기준 전체 775개 ESG 평가 참여 기업체 중 식품기업 숫자는 37개 회사로 적지 않은 수준이나,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식품기업 업체수가 19,043임을 고려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임. 또한, 평가 기준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국한되어 있음에 따라, 국내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ESG의 기준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3.2. 주요 업종별 문제점

3.2.1. 전통식품

- 전통식품은 주재료 혹은 부재료를 국산 원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전통식품 시장 파악에 활용되는 통계는 식약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자료로, 품목을 기반으로 조사되어 '전통식품'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보기 어려운 실정임. 전통식품산업의 문제점과 강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전통식품 분야 통계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전통식품은 식문화 계승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제고 등 식품산업의 주요 목적과 관련성이 높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산업 성장과 수출 확대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함. 국내산 장류를 비롯한 소스류 산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한류 확산 속에서 수출중심의 성장 역량이 높은 산업이므로 검역 대응, 홍보 등 수출 확대가 당면 과제일 것임.
- 전통주산업과 관련하여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한 R&D 투자가 부족함. 전통주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새로운 설비 및 품질향상을 위한 R&D 투자에 적극적일 수 없는 상황임.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새로운 제품출시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지만, 품질향상과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음. 이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에서 시작한 막걸리 열풍으로 국내 막걸리의 인기가 크게 높았던 시기가 있었음. 하지만 업체들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시들해진 경험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전통주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제조업체 규모의 양극화, 가격 안정화, 수출 확대, 제조단계 자동화율 제고 등의 선결과제가 있음. 2020년 김치제조업체의 판매액 규모 10억 원 이하 기업이 전체의 58.2%를 차지하고 있고, 김치 가격은 2020년 3,154원/kg로 전년 2,355원/kg 대비 33.9% 급등함. 국산 김치의 높은 식품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수출 전략 마련이 요구될 것이나, 수출 시 활용 가능한 국제 표준인 ISO22000인증업체 비중은 2.4%, FSSC 22000 인증업체 비중은 1.5%, 아랍권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할랄인증 보유업체 비중은 1.5%에 불과하여 수출 확대 측면에서 인증 취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동화가 미흡한 공정은 절단된 재료의 이물 등을 제거하는 원료 선별공정과 포기 김치의 속냉기 공정 등임.
- 국내 한식 진흥을 위해서는 젊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한식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식 업체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고, 일반음식점 내 타 업종과 비교하여 평균 매출액이 낮음. 또한 사업주 연령대가 높은 편이며, 한식의 경우 30대 이하 고객 비

중이 3.5%로 전체 외식업체 평균인 14.7%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배달 및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대한 적응력도 높지 않은 편임.

- 해외 한식 진흥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할 것임. 코로나19 이후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한식 콘텐츠의 유행은 한식에 대한 기존 해외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켰음. 현지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높은 비빔밥, 김밥, 한국식 치킨 등 고부가가치 HMR 제품, 가공도가 높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장기적 과제로 판단됨.

3.2.2. 성장 유망업종

- 미래유망식품의 성장산업화가 필요하나, 간편식품산업과 건강기능식품은 미래유망식품의 한 분야로 R&D, 신성장산업화와 관련된 투자가 3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 기간 추진되었고,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투자,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선순환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 식품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정부의 서포트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내수 시장의 포화도를 고려하여 간편식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국가 간 통상 관련 문제는 정부의 주도하에 해결해야 할 과제임.
- 특수용도식품은 국내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을 비롯한 특수용도 식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연구개발 및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 이르는 산업화 지원이 필요한 단계임. 대체식품의 경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기술 확보가 과제일 것임.

3

국내외 식품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국내 식품산업 정책 동향

1.1. 제1차 ~ 제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교

- 현재까지 수립된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비교하면 <표 3-4>와 같음. 지난 15년간 공통적으로 강조해 온 정책으로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농식품 R&D·기술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식품 안전 등이 있음.
- 제1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식품 안전 세부과제가 포함되고, 한식 세계화를 포함하여 글로벌 수출산업이 강조된 특징이 있음. 제2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력교육, 정보 강화 등의 세부과제가 추가되었으며,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전략식품 육성과 농공상 융합형기업 육성 등이 강조됨. 또한 기능성 식품과 연관산업 활성화가 명시되고, 식품 안전 중심에서 식생활교육과 인증제도 등을 포함하는 소비자 정책 분야로 확대됨.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과 4차산업 대응 등 선제적 육성이 강조되

고, 균형성장을 키워드로하는 중소/영세기업 성장 지원 정책이 새롭게 포함됨.

〈표 3-1〉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흐름

발전 전략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제2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기간	'08-'12	'12-'17	'18-'22
비전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 식품산업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목표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체질 강화 식재료 산업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구조 정착 해외시장개척 및 전략품목 육성으로 신시장 개척 소비자 보호 강화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도약 국산농산물 사용 인센티브 확충으로 농업과 동반성장 유망분야 육성, 취·창업 지원 등으로 식품분야 고용확대
목표 지표	- 식품산업 매출액 ('06) 100조 원 → ('12) 150 - 식품산업 종사자 ('06) 163만명 → ('12) 178 - 농수산물 수출 ('07) 38억불 → ('12) 100 -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 식품산업 매출액 ('09) 131조 원 → ('17) 245 - 농식품 수출 ('09) 48억불 → ('17) 200 - 식품분야 고용 ('09) 176만명 → ('17) 200	- 식품산업 매출액 ('15) 210조 → ('22) 330 - 국산농산물 사용량 ('16) 519만톤 → ('22) 690 - 식품산업 종사자수 ('16) 233만명 → ('22) 268
주요 정책 과제	①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공급 강화 ② 식품 R&D 투자 확대 ③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세계화 ④ 농수산물 수출 확대지원 ⑤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⑥ 식재료 산업 활성화 ⑦ 농어업·식품산업 연계를 강화	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인력양성 등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②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③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 소비자 권리정보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①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②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③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 ④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⑤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1.2. 식품산업 진흥 관련 법률

○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로는 식품산업진흥법이 대표적이며, 외식산업 진흥법, 김치 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한식진흥법 등이 개별 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립되어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품산업 정책을 세울 때에는 농업·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표 3-2〉 식품산업 진흥 관련 법률

관련 법률	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식품산업 진흥법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의2.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식산업 진흥법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외식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외식산업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외식산업의 창업지원 등 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6. 외식산업 관련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 법률	내용
	<p>8. 외식산업 발전의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사항</p> <p>9. 외식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p> <p>10.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대학·연구소 및 외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김치산업 진흥법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의2. 수입김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8.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9.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술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관련 법률	내용
	<p>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한식진흥법	<p>제5조(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한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09.05.)

2. 국외 식품산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식품산업 정책의 시사점

2.1. 해외 주요국(일본, 미국, 유럽)의 식품정책 동향

- 일본은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미국은 「농무부 2022-2026 전략계획」을, 유럽은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통해 미래지향적 식품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표 3-3〉 주요국 정책 동향 요약

구분	일본	미국	유럽
정책 문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2020)	농무부 2022-2026 전략계획 (2021)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2020)
정책 동향	신규 가치 창출을 위한 수요 탐색 글로벌 시장의 전략적 탐색 소비자와 식품·농업 연계성 강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신뢰 구축	안전·건강·저렴·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식품 공급의 안정성 확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제공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식품 분야의 공정한 경제적 보상 유기농업 확대
주요 정책	개호식품(스마일 케어 식품) 보급 일본 농림 규격(JAS) 제정 및 활용 촉진 글로벌 생산지 확대 및 일본식품해 외진흥센터 (JFOODO) 활성화를 통한 수출 확대 화식(和食) 문화 보존 및 계승 지리적표시(GI)제도 보급 및 활성화 지역사회 지원 농업(CSA) 활성화 식품정보 추적시스템 구축	보충적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아동 영양 프로그램 (CNP) 여성·영·유아를 위한 특별보조영양 프로그램(WIC) 식중독 등 식품관련 질병 예방 및 관리 배양육 관련 문제 대응 및 관리 규정 마련	유통과정에서 손실되는 식품 활용 환경친화적 식품 포장 지리적 표시제 등 유통 기준 개선·유통 거리 단축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제공(라벨링 등 활용) 환경적 비용 고려한 조세체계 개편 2030년까지 1인당 음식물 쓰레기 50% 감축·새로운 음식물 쓰레기 계층법 사용

자료: 저자 작성

2.2. 국내외 식품산업 정책의 시사점

2.2.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요구

- 식품산업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산업의 영역으로 소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임.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ESG,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지속가능한 로컬 가치 사슬 (Local Value Chain)을 촉진하고 현지 및 지역 생산에 뿌리를 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식품 시스템을 구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은 생산에서 유통, 소비, 폐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안전 관련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식생활교육과 인증제도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있지만, 식품기업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제4차 식품산업 진흥정책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식품산업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후변화 대응, ESG 요구에 대한 대응, 건강한 식품생산 등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발판으로 식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2.2. 식품 공급의 안정성 확보

-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및 교역 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외부효과에 의한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및 변동성은 전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즉,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영양 불안정이 초래되면서, 국민들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필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영양안보에도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음식료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
- 우리나라도 2022년 4월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로 인한 식용유 값 상승, 밀, 콩 등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등의 영향으로 식품 공급의 안정성과 자급률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쌀 이외의 작물의 자급률이 낮아 당장의 자급률 상승을 꾀하기는 힘들 실정이며, 결국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농업개발 확대. 위기대비 비축량 및 유보금의 적절한 확보가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정책의 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2.3. 신규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

- 전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내수 식품시장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일본은 수요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고(高)부가가치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촉진함. 또한,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식품산업의 해외사업 진출 촉진을 위해 수출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생산지를 구축하고, 품목별 당면과제에 따라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함.
- 우리나라 또한 최근 들어 급변하는 시장 변화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건강기능식품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에서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K-food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다만 방향성과 정책 수단의 활용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에 더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의 평가

1.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달성 평가

1.1. 목표 대비 달성 현황

○ 3차 진흥계획은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라는 비전과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미래산업으로의 도약, 농업과의 동반성장, 식품분야 고용 확대를 목표로 설정함.

- 3차 진흥계획에서는 혁신 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체계를 마련함.

1.1.1. 매출액(식품제조/외식) 목표 달성 현황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매출액 목표 : ('15) 210 (102/108)조 원 → ('22) 330 (158/172)조 원임.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목표로 하였던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차츰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음.

- 특히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에 계획하였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1.1.2. 종사자수(식품제조/외식) 목표 달성 현황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종사자수 목표는 ('16) 233 (34/199)만 명 → ('22) 268 (38/230)만 명임.

○ 종사자 수도 매출액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2015년 이후 식품산업의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업의 종사자 수가 12.4% 감소하였음.

○ 식품제조업의 경우 이미 목표하였던 성과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추세대로라면 목표 대비 10% 이상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2020년 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종사자 수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됨.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경기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가 2021년 4분기의 70.34보다 2022년 2분기 85.56으로 15.22%p 증가하였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외식업 종사자 수 23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1.1.3. 국산 농산물 사용량 목표 달성 현황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국산 농산물 사용량 목표는 ('15) 515만 톤 → ('22) 690만 톤임.

- 국내 식품 제조업체에서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국산 농산물의 양은 2020년 약 592만 톤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690만 톤의 85.8% 수준임. 가격경쟁력으로 수입 원료 사용이 높은 편이지만, 국산 원료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하지만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36%를 추가하여도 약 634만 톤으로 목표 대비 91.7%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1.2. 주요 정책과제별 성과와 한계

1.2.1. 미래유망분야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

- “미래유망분야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산업활력대책」(2019.12)을 수립하여 5대 유망 식품 분야에 대해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도를 정비한 측면이 높게 평가되나,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논의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나, 인프라 강화 관련 예산이 계획 후기에 집중 투입되어 성과를 효율적으로 거두지 못함.
-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을 중심으로 R&D를 확대하고 유망 식품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여 추진함. R&D 예산이 2021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연장으로 확대되었으나, 2018~20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정부 R&D에서의 비중이나 제조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여 절대적 규모가 작은 수준임. 또한 국가 식품 R&D가 산업계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푸드테크 미래식품 계약학과’를 신설/확대하여 성장기반을 조성하였으나, 식품 R&D를 추진할 연구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관련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의 세부 과제로 추진된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는 수출경쟁력 제고, 온라인 홍보 강화, 유망품목 및 유망시장 수출 확대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과 물류난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증가한 62.1억 달러를 기록하여 상반기 기준으로 농식품과 수산식품 각각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1.2.2. 식품·외식산업 균형 성장

- “식품·외식산업 균형 성장”은 3차 진흥계획에 새롭게 추가된 정책과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소비촉진 지원이 확대되면서 식품기업의 경영 및 성장 지원 규모는 미흡한 수준임.
- 지역단위 외식업 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등 외식업 협업화를 위한 정책은 잘 추진이 되었으나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2022년 5월 기준 448개) 집중육성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공상기업 지정관리, 판로개척 지원, 선도기업 육성 등 성장 단계별로 지원사업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함.

1.2.3.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는 농업과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활성화, 전통식품 육성, 한식 진흥을 통해 국내산 원료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1차 진흥계획부터 주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생산자 조직화와 가공용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한 계약재배는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계약 유지와 물량 조달 한계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긴 어려움. 단, 중소식품기업이 국산 원료를 구입 시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매이행 보증보험’의 도입과 외식업체 대상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전통식품의 경우 우수 전통식품 생산을 위한 균주 보급,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추진됨. 한식 진흥을 위해 「한식진흥법」이 제정('19.8)되고 하위법령이 시행('20.8)되고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마련이 추진되었으나, 예산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 한식·음식 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평창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한식의 해외 홍보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한식의 우수성에 대한 가치 확산, 안정적인 한식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한식진흥법)를 마련하는 등 정책기반을 다졌으며, 지역별 특색있는 음식을 기반으로 한 음식관광 활성화를 추진함.

1.2.4.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 소비자의 농식품 품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식품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와 식생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 목표가 일관되지 않음. 소비자의 소통·협력 기반 조성, 소비자와의 정책 파트너십 형성의 두 분야에서 목표가 수립되었으나, 목표 달성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음.
-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가 확산되고 교육기관 지정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이 감소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됨. 한편,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관련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현물지원 확대의 기반이 조성된 것은 성과로 평가됨.
- ‘사전예방적 안전 관리 강화와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 신뢰 제고’는 국내 농식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된 과제로 국가 인증 농식품 지원이 축소되고, GAP 및 HACCP 인증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예산이 정체·감소되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중소 및 영세 규모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HACCP 지원, 원료축산물 유통이력관리 강화, 간편식 안전성 제고 등 가공식품 안전관

리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모색될 필요가 있음. 최근 소비자의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의 관련 활동이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쳐 식품산업 경쟁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ESG 경영 확대가 향후 정책과제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1.3.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별 예산 추이

- 농림축산식품부 내 사업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 개발,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기술사업화지원,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등의 예산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맞춤형 혁신 식품 및 천연 안심소재 기술개발사업이 신규 추진됨.
- 식품·외식산업 균형 성장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및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이 확대되었고, 수출 관련 사업들이 다수 편성되어 있음.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만큼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전통식품 관련 사업 등 다수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매년 유사한 규모로 사업이 편성되고 있음.
- 농식품 소비자 신뢰 제고 측면에서는 제3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기간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등 식품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신규 사업이 다수 편성되고 있음.

〈표 4-1〉 연도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예산(2017-2022)

사업명 및 내역사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축방역	10,427	15,889	-	-	-	-
검역해소품목및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4,400	3,000	2,700	3,700	4,000	4,00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34,400	32,508	20,981	6,708	20,826	33,816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11,735	12,056	21,378	39,224	45,320	35,842
국가인증농식품지원	9,581	9,099	9,178	8,260	7,817	7,222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2,636	2,636	2,806	2,948	6,051	6,331
기술사업화지원	10,284	8,910	7,181	205	14,946	24,460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33,168	34,727	30,959	27,896	30,062	31,750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14,402	14,705	14,115	55,530	15,218	15,659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옹자)	38,300	38,300	38,300	39,300	43,170	38,850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	-	-	-	600	1,200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	-	6,781	6,951	83,751	45,207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22	71,364	72,523	79,484	80,903	85,483
농식품글로벌비대면 마케팅지원	-	-	-	-	6,200	8,282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옹자)	377,500	338,642	338,642	372,882	372,882	402,882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	-	-	3,500	8,900	8,900
농식품바우처지원	-	500	-	-	-	-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농식품 시장 개척)	8,420	8,420	7,578	8,103	7,444	6,544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38,232	48,520	52,875	52,047	49,307
농업관측	8,339	8,518	8,520	16,860	17,138	16,741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확산 지원	-	1,608	2,776	3,880	23,950	31,652
맞춤형혁신식품및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	-	5,631	10,509	10,506	-
수출인프라강화	43,478	47,896	43,106	44,538	47,506	47,506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10,427	15,889	-	-	-	-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14,431	13,231	9,928	11,381	14,842	17,887
식품외식종합자금(옹자)	123,280	135,280	145,000	177,000	195,800	161,800
양곡관리특별회계전출(일반)	842,656	1,296,277	1,674,800	1,607,313	1,615,355	1,773,419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	-	13,540	15,780	15,780
전통발효식품육성	13,732	7,026	8,400	9,146	14,383	11,911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7,708	5,535	-	-	-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2,940	2,581	4,500	5,050	10,650	9,86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25,393	20,896	20,636	-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제주)	2,940	2,581	1,501	-	-	-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7.2	7.2	7.2	7.2	7.2
축산물 HACCP 지원	-	1,650	1,650	1,650	1,567	1,714
축산물 수급관리	105,533	78,340	118,505	117,390	234,873	116,378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	860	1,666	1,461	1,212	2,850
친환경 우수 농식품 인증	13,020	13,922	11,847	11,936	11,710	11,674
푸드서비스 선진화	1,800	1,450	1,350	2,630	72,250	5,035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10,539	12,106	9,858	13,396	13,134	12,473

자료: 저자 작성.

2. 세부 사업별 평가

2.1.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2.1.1.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가정간편식 등)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미래대응 유망산업으로 선정된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계획한 대부분의 목표들이 세부추진내역에 따라 적절하게 실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계획 초기보다는 후기에 예산이 집중되어 원료은행 착공, 기능성HMR 실용화 지원센터 건립이 2022년에 들어서야 진행됨.
-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 관련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3차 계획 후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음. 하지만 계획의 추진 단계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1.2.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차세대 10대 식품 기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R&D에 집중 투자하여 2018년 이후 총 70건, 약 1,5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야별 R&D는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 내 과제 단위로 반영되어 있으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1.3.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중소식품기업, 외식업체의 식재료 조달을 원활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전처리 비용 절감, 국산원료 사용확대 등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함.

-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예산의 안정적 확보도 잘 이루어졌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의 유동성 완화를 위해 가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식품가공원료매입 자금 160억 원을 증액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보여줌. 또한 우대금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국산 농산물 구매 실적 증대를 유인함.

2.1.4.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패키징센터를 통해 식품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이후 총 14건, 약 144억 원을 투자하여 식품 포장 관련 R&D를 진행하였음.

2.2.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2.2.1.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으로 혁신인력 양성

- 식품산업의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원 과장의 기능성식품 계약학과 및 푸드테크·미래식품 계약학과를 신설하였음. 또한 청소년 대상 식품산업 관심 유도 및 비전제시를 위해 식품산업 진로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산·학 협업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창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식품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채용부터 고용유지 사후관리까지 식품외식산업 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함.
-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함.

2.2.2.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세부 과제였던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의 경우 이후에 수립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에 따라 R&D의 방향성이 변화하였음.
- 2020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이 일몰되면서 관련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민간중심 R&D 사업화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가 중심의 연구에서 민간 중심의 연구로의 방향성 전환을 볼 수 있음.

2.2.3.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 스타품목의 수출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하고, 선박 부족, 운임상승 등 전세계적 물류난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업 하였으며, 한류 확산 및 온라인 유통·소비 확대 및 건강·간편식품 선호 등 수출 확대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한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함.
-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고도화, 단계별 저온유통체계 구축, 새로운 스타품목 육성 등의 농림축산식품부 내부과제와 국가 간 식품안전 기준 협상(산업통상자원부), 한류를 통한 마케팅(문화관광체육부) 등의 다부처 협업이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로 남아있음.
- 식품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의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식품제조업이나 농산물에 비해 외식산업 관련 예산은 크기가 작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2.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 한미 FTA 협상 타결('07.6)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일환으로 농어업 발전전인을 위해 식품산업의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2년까지 식품기업, 연구소 등 160개 유치 및 6개의 기업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예산은 202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감소하였음. 기업지원시설의 경우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되었으나 투자유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3.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 지원

2.3.1.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HACCP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HACCP 인증 획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업종(품목)전환 컨설팅, 온·오프라인 전용판매관 입점 지원 및 신규 판매채널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2019년 종료되고 식품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 사업 내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식품 품질·위생역량 제고, 식품판로 지원(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육성) 3개 내역사업이 신설되었으나 기존의 예산보다 감소하였음.

2.3.2.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전망 구축

- 지역단위 외식업 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등 외식업 협업화를 위한 정책은 잘 추진이 되었으나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외식업 관련 예산은 2021년 외식 할인 지원사업 예산 외에 대부분이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만이 예산이 증가함.

2.3.3. 식품·외식업체 협력·발전모델 발굴 및 확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ESG/CSR대상”,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와 같은 우수사례 포상들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ESG/CSR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식품외식업체만이 수상할 수 있도록 주최측과 포상 관련 협의가 필요함.

2.3.4.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

-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2022년 5월 기준 448개)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기존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종료되고 농공상기업 판로지원 예산이 추가되었지만 지역 식품산업 육성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음.

2.4.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2.4.1.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목표로 제시한 구매이행 보증보험 도입 및 운영, 계약 재배 확대, 우수 협력 사례 발간 관련 사업은 진흥계획 기간 내 충분히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단, 가공용 적성품종 개발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업을 농진청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단계로 실질적인 품종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 완화의 경우 기재부와의 협의 단계에서 중단된 상황임.

- 식품외식업계의 국산 식재료 사용 확대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만큼 관련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4.2. 농업인 소규모 가공 활성화 및 판매 플랫폼 지원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목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확대, 농가형 소규모 가공에 필요한 현장애로기술 발굴·지원, 농업인 가공제품에 대한 판로·마케팅 지원으로 각 분야별 사업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유연하게 추진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한계가 존재함.
-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련 사업의 예산이 식품판로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추진기간 꾸준히 감소하였음.

2.4.3.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해 김치, 발효식품, 전통주, 소비기반 확충 분야의 정책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내 전통발효식품 진흥사업 및 전통주 진흥사업, 김치산업 육성사업, 발효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등 진흥계획 추진기간 내 분야별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 특히, 김치와 전통주 분야에서 진흥계획이 수립되고 소스산업화센터, 김치 종균 보급시설 조성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음.
-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기간 국산 김치의 수출 물량이 크게 성장하였고, 기업 맞춤형의 종균 보급을 통해 전통식품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전통식품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수 전통식품 품질인증 사업체 수가 증가함.
- 그러나 3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제시한 목표인 국가별 김치 수요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한국 김치에 대한 인지도 제고, 지역특산물 범위 확대(주세법 시

행령 개정), 탁·약주 외 주종도 2인 이상 공동면허 발급이 여건상 추진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 전통식품과 관련하여서는 매년 전통식품산업 육성 내에 포함되어 있던 기초통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은 20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이후 꾸준히 증가함. 내역 사업별로는 한국술산업 육성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김치산업 육성사업, 전통발효식품 관련 사업 예산은 증가함.

2.4.4. 한식·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 5개년 사업 목표는 평창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한식의 해외 홍보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한식의 우수성에 대한 가치 확산, 안정적으로 한식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한식진흥법) 마련 등 정책기반 공고화, 지역별 특색있는 음식을 기반으로 한 음식관광 활성화임. 계획한 대부분의 목표들이 세부추진내역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한식진흥법 수립 이후인 2020년부터 추진됨.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대폭 삭감된 2019년을 제외하고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었음. 그러나 2022년 음식관광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감축된 점은 한계로 보임

2.5.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2.5.1.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부문에서는 소비자의 소통·협력 기반 조성, 소비자와의 정책 파트너십 형성의 두 분야에서 3차 진흥계획 목표가 수립되었으나, 수립 당시 목표 달성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내 추진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 농식품 소비정보망 활성화 사업,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등 관련 사업의 예산이 유사한 규모로 편성됨.

2.5.2.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 본계획에서는 건강식생활 확산 기반 마련, 농식품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건강식생활 확산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국가표준식품성분 DB 활용 및 전문 식생활체험 지도사 양성사업을 제외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시범사업 추진 중인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는 신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

- 소비자 교육 부문에서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예산은 3차 진흥계획 기간 매년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점차 감소하였고,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예산은 2021년 증액되어 본격적인 추진 준비단계에 있음.

2.5.3.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는 농산물 GAP, 축산물 및 가공식품 HACCP 제도를 중심으로 3차 진흥계획 목표가 수립되었으며, 제시된 목표에 따라 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GAP 인증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예산은 2019년 전년 대비 감소한 이후 부터 2022년까지 유사한 규모로 편성·추진되었으며, GAP 운영 예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사한 규모로 편성됨. HACCP 컨설팅, 현장기술지도, 교육, 홍보, 평가예산 역시 유사한 규모로 안정적으로 편성됨.

2.5.4.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 제고

-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국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3차 진흥계획 추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해외식품인증센터를 운영하여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한식당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별도의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음.

5

식품산업 전망과 4차 진흥정책 전략도출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식품산업 전망

1.1. '식품산업 진흥'의 현장 중심적 구조화

-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의 관점에서 식품 산업진흥의 요소들을 구조화할 수 있음. Y라는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요소가 필요하지만, 자본(K)과 노동(L)이 기본적 구성요소임. 이 식에서 f 는 자본 및 노동을 조합하여 최종산출물 Y를 생산해 내는 생산기술을 나타내며, Y는 '식품산업 진흥'을 의미함.

$$Y=f(L,K)$$

- 본 연구는 식품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식품산업 진흥'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자 함. 이를 위해 '식품산업 진흥'을 구조화하고, 식품산업의 대내외 여건과 관련된 요소들로 구분함.

1.1.1. 식품산업 생산활동을 둘러싼 요소

가. 식품시장을 둘러싼 환경/여건 변화

- 식품산업을 향한 소비자 및 사회/환경의 요구, 주기적 감염병의 가능성, 식량 안보 및 기후변화 등 각종 위기의 도래, 인구절벽 등과 같은 사회 변화 전망, 전통 식생활의 계승/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등이 이와 관련되므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식품시장 환경 및 여건은 ① ESG 대응, ② 감염병의 주기적 출몰 등 위기 대응 ② 디지털화, 온라인화, 푸드테크 대응일 것임.

나. 식품산업의 가치사슬 상에서의 전후방산업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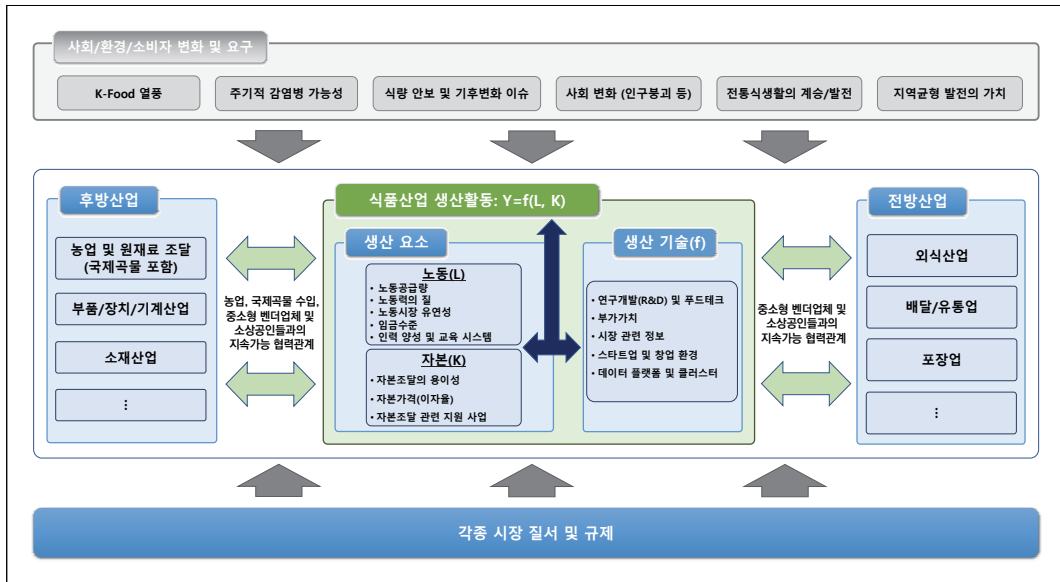
- 산출물(Y)의 생산활동과 대내외 시장 여건 변화 이외에도, 원료의 조달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의 전후방산업의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식품산업의 진흥과 관련성이 큰 전후방산업은 농업 및 원재료 조달(국제곡물 포함), 장치/기계산업, 소재산업, 포장산업, 외식산업, 유통업 등임.
- 한편, 중소형 벤더업체 및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협력관계 또한 산출물의 생산 및 유통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임.
- 최종적으로 생산된 산출물(Y)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내수/수출 수요, 홍보 및 마케팅, 판로 개척 및 판로 관련 정보 제공 등이 연관됨.

다. 각종 시장 질서 및 규제

-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질서와 규제도 식품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제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에서 추진된 정책을 포함한 대내외 정책 여건도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1.1.2. 식품산업 생산활동과 관련된 요소

〈그림 5-1〉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된 요소의 구조도



자료: 직접 작성.

○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L)의 경우 노동공급량(양적 측면; 외국인 노동력), 노동력의 질(high skilled and low skilled labor: 생산직/판매직/연구직, 전문인력), 노동시장 유연성, 임금수준, 노동시장 관련 정보, 인력 양성 및 교육 시스템 등이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됨.

- 따라서 노동 부문의 여건 변화와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추이, 식품 관련 고등교육시설 현황, 식품산업 종사자 수 등의 지표를 살펴볼 수 있음.

○ 자본(K)의 경우는 자본조달의 용이성, 자본가격(이자율) 및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자본 조달 관련 지원사업 등이 관련됨.

- 따라서, 환율, 이자율 등 경제적 대외 여건 변화 바탕으로 식품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전망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생산기술(f)과 관련해서는 R&D 및 푸드테크, 부가가치가 포함됨.

- 플랫폼, 정보제공, 스타트업/창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 및 클러스터 등의 개념도 관련됨.

1.2. 세계 식품시장 여건 변화와 전망

1.2.1. 세계 경제성장률, 환율, 무역수지, 상품수출, 국제유가

- 세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9%로 2010년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5.5%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음.
- 원/달러 환율은 2020년 5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다 2021년에 상승세로 전환함. 한국 무역협회의 환율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금리 차이 확대에 의한 원화 약세가 심화됨. 2022년 초 1달러당 1,189.50원으로 시작된 환율은 2022년 2분기 1,300원을 넘어 4분기에는 1,300~1,400원 내에 형성되어 있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 FOMC를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 2023년 긴축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러-우 전쟁의 장기화 및 중국 내 코로나 봉쇄 조치로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 원화 약세로 이어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수지, 무역수지는 2022년 3분기 악화됨.
- 2020년 5월 이전 급감한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한 이후 2022년 2분기까지 급격하게 증가함. 2022년 7월 및 8월 원유가격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되면 식품산업이 직면하는 국제유가는 더 인상될 수 있음. 이는 국제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농업생산 및 식품기업의 생산비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2.2. 세계 식품산업 전망

가. 세계 식품시장 규모

○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시 식료품 시장이 약 4.2조 달러(전년 대비 4.25% 성장), 음료시장이 약 2.7조 달러(전년 대비 8.92% 감소)를 접하여 전체 규모가 약 7.7조 달러 수준임.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59%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 식품시장(2020~24년)은 연평균 4% 이상 성장하여 2024년에 약 9.2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4년 식료품 시장 규모는 5조 달러에 근접하며, 음료시장은 약 3.3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5-1〉 전세계 식품시장 규모(시장구분별)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p)	2023(e)	2024(e)
세계 식품 시장	7,415.3	7,743.2	7,832.3	7,707.6	8,141.9	8,428.7	8,746.5	9,154.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시장	3847.2	3,994.2	4,013.7	4,184.4	4,349.4	4,514.9	4,697.6	4,966.9
	(51.9)	(51.6)	(51.2)	(54.3)	(53.4)	(53.6)	(53.7)	(54.3)
음료 시장	2,853.4	2,968.7	2,992.3	2,725.4	2,933.9	3,039.6	3,153.4	3,261.2
	(38.5)	(38.3)	(35.4)	(36.0)	(36.1)	(36.1)	(36.1)	(35.6)
담배 시장	714.4	780.3	826.3	797.8	858.6	874.3	895.5	926.3
	(9.6)	(10.1)	(10.5)	(10.4)	(10.5)	(10.4)	(10.2)	(10.1)

주: 제조업 기준임. (p)는 잠정치, (e)는 추정치를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 식품시장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아·태 지역, 유럽, 북미 순임. 향후(2020~24) 식품시장 증가예상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6,793억 달러, 유럽 3,180억 달러, 북미 1,935억 달러, 중동·아프리카 1,672억 달러 등임.

〈표 5-2〉 전세계 식품시장 규모(대륙별)

단위: 억 달러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p)	2023(e)	2024(e)
세계	7,415.3 (100.0)	7,743.2 (100.0)	7,832.3 (100.0)	7,707.6 (100.0)	8,141.9 (100.0)	8,428.7 (100.0)	8,746.5 (100.0)	9,154.4 (100.0)
유럽	2,088.7 (28.2)	2,198.8 (28.4)	2,140.7 (27.3)	2,062.7 (26.8)	2,153.3 (26.4)	2,212.9 (26.3)	2,274.1 (26.0)	2,380.7 (26.0)
아시아, 태평양	2,832.1 (38.2)	3,031.3 (39.1)	3,138.9 (40.1)	3,125.0 (40.5)	3,330.6 (40.9)	3,470.5 (41.2)	3,628.9 (41.5)	3,804.3 (41.6)
북미	1,261.3 (17.0)	1,297.8 (16.8)	1,329.1 (17.0)	1,323.8 (17.2)	1,403.6 (17.2)	1,438.9 (17.1)	1,477.0 (16.9)	1,517.3 (16.6)
중남미	744.6 (10.0)	706.4 (9.1)	689.7 (8.8)	664.1 (8.6)	687.2 (8.4)	706.7 (8.4)	728.2 (8.3)	753.1 (8.2)
중동·아프리카	488.5 (6.6)	508.9 (6.6)	534.0 (6.8)	531.9 (6.9)	567.1 (7.0)	599.8 (7.1)	638.4 (7.3)	699.1 (7.6)

주: 제조업 기준임. (p)는 잠정치, (e)는 추정치를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IS의 세계 식품시장 규모 추정치를 기준으로 수산물 및 동물 사료 품목이 제외된 STATISTA 통계자료의 세계 식품시장 규모 추정치를 일치시켜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추정한 결과, 2022년 기준 스낵류(19.5%), 육류(15.0%),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3.5%), 낙농품(12.5%), 채소류(11.5%), 과일 및 견과류(9.3%), 편의식품(7.0%), 영유아용 식품(3.5%), 소스 및 향신료(2.9%) 순으로 추정됨.

○ 추정된 2020년~2024년 연평균 증감률 측면에서 잠재력이 있는 품목은 세계 인구 증가 추세와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관련된 식품, 간편식품으로, 전체 식품 연평균증감률인 4.4% 대비 높은 유아용 식품(5.4%), 낙농품(5.3%), 편의식품(5.0%) 및 육류(5.0%), 과일 및 견과류(4.8%), 채소류(4.7%) 등이 유망 품목으로 추정됨.

〈표 5-3〉 세계 농림축산식품 시장규모 추정(2020-2024)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구분	2020	2021	2022(e)	2023(e)	2024(e)	비중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21-22)	연평균 증감률 (20~24)
	전체	7,708	8,142	8,429	8,747	9,154	100.0%	3.5%	4.4%
1	스낵류	1,509	1,573	1,648	1,658	1,714	19.5%	4.8%	3.2%
2	육류	1,140	1,198	1,267	1,315	1,383	15.0%	5.8%	5.0%
3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129	1,198	1,141	1,264	1,324	13.5%	-4.8%	4.1%
4	낙농품	934	995	1,056	1,092	1,149	12.5%	6.2%	5.3%
5	채소류	868	920	972	991	1,042	11.5%	5.6%	4.7%
6	과일 및 견과류	695	738	782	799	838	9.3%	5.9%	4.8%
7	편의식품	521	556	591	607	633	7.0%	6.3%	5.0%
8	영유아용 식품	261	278	296	303	321	3.5%	6.3%	5.4%
9	소스 및 향신료	217	225	243	243	253	2.9%	8.1%	3.9%
10	스프레드 및 당류	217	235	222	243	253	2.6%	-5.8%	3.9%
11	유지류	217	225	211	233	243	2.5%	-6.0%	2.9%

주: 수산물 및 동물사료가 제외된 STATISTA 통계자료(2022년 7월 기준)와 aT FIS 전 세계 식품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글로벌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 거래 형태별 세계 농림축산식품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오프라인 시장(84.6%), 온라인 시장(15.4%)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증감률 추정치(2020~2024)를 고려하면 전자상거래(18.8%) 및 배달 식품(18.8%)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장(17.3%)이 오프라인 시장(2.3%)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5-4〉 거래 형태별 글로벌 농림축산식품 시장규모 추정(2020-2024)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e)	2023(e)	2024(e)	비중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21-22)	연평균 증감률 (20~24)
전체 시장(A+B)	7,708	8,142	8,429	8,747	9,154	100.0%	3.5%	4.4%
오프라인 시장(A)	6,796	6,901	7,130	7,230	7,431	84.6%	3.3%	2.3%
온라인 시장(B)	912	1,241	1,299	1,517	1,724	15.4%	4.7%	17.3%
배달 식품	565	770	813	920	1,032	9.6%	5.6%	16.3%
전자상거래	347	471	486	597	691	5.8%	3.2%	18.8%

주: 수산물 및 동물사료가 제외된 STATISTA 통계자료(2022년 11월 기준)와 aT FIS 전 세계 식품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글로벌 식품시장 2022년 분석 및 2023년 전망

나. 세계시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ESG 요구 심화

- 해외에서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ESG 공시와 활동을 강조하고 있음.
- ESG 평가의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평가기관 및 체계에 따라 평가 결과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준이 변하거나 가중치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OECD 2020).
- 최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ESG 달성(디지털역량과 지속가능성 등의 이름으로)에 관련한 논의들이 새롭게 등장함.
- 미국은 기후 위기의 심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면역력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건강식품과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관련된 품목이 유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식품이자 식품 폐기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물 기반 단백질 식품과 업사이클(up-cycle) 식품⁵⁾이 유행하는 등 푸드테크를 중심으로 식품시장이 재편되고 있음.
- EU EIT는 코로나19 이후 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함. 유럽의 2021년의 식품 5대 트렌드는 건강, 편리성&기술, 대체단백질, 지속가능성 및 폐기물 감소, 새로운 맛과 경험이며, 2022년 유럽의 식품 트렌드는 기후변화에 대한 역할, 재생 농업, 대체 단백질, 젊은 사람들, 친환경 라벨링임.

1.3. 국내 식품시장 여건 변화 및 전망

1.3.1. 경제적, 인구사회학적 여건 변화

- 연도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GDP)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면 2~3%대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함. 2021년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IMF는 대한민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2.5%, 2023년에

⁵⁾ 소비되지 않고 폐기되었을 재료 중, 검증 가능한 공급망에서 제조된 식품을 의미함.

는 2.9% 수준으로 전망하였음.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21년 기준 3,976만 원으로 4,000만 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 국제곡물가격,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도 급등하는 추세임.
- 정부 모태펀드 예산은 2023년 3,135억 원으로 2020년 1조 원 대비 68.7% 감소함. 모태펀드의 축소는 식품 벤처기업이 자금 확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요인임.

1.3.2. 인구 및 소비트렌드 변화

- 코로나19 확산 이후 출산율이 저하(0.92 → 0.84)하고 사망률은 상승(574.8 → 593.9)해 2020년 총인구는 전년보다 0.1%(49,933명) 증가함. 또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김상효 외 (2020)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인구구조 변화로 식품 총수요가 감소하는 식품절벽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1인 가구 비중도 2020년 30.3%에서 2025년 3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
-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9% → 15.7%로 상승하였고, 1인 가구 비중은 30.2% → 31.7%로 상승함.
- 2010년 이후 가구의 실질 식품비 지출액 추이를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신선식품 지출액은 감소하고 가공식품 및 외식 지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최근 가구 내 식품비 지출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월평균 총 식품 지출액은 코로나19 확산 직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은 2021년에는 식품 소비량 변화 때문에 지출액을 변화하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감소한 것과 반대로 소비 품질수준 변화와 신선·가공·외식 소비 변화로 인해 지출액이 달라졌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증가하였다는 점임. 이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생활의 고급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COVID-19의 여파로 외부활동이 축소되고, 개인별 취향과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소비하는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만의’를 키워드로 하는 소비트렌드인 ‘미코노미(ME-conomy)’가 급부상하고 있음.
- 건강과 간편함을 중시하는 식품소비 경향이 나타나고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이 급증하는 등 소비트렌드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됨(김상효 외, 2020). 또한, 고품질의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변화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품 시장 환경 조성을 선도할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1.3.3. 식품산업 주요 이슈 및 관련 전망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합계 출산률의 저하, 총 인구 증가폭의 감소, 사회의 고령화가 전망되고 있으며, 식품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대학의 식품영양학 관련 학과 수는 2017년 287개에서 2022년 313개로 증가하였으나 졸업자 수는 2017년 7,393 명에서 2020년 8,550 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에는 8,268 명으로 감소함. 이에 따라 생산인력과 고급 연구인력 양 측면에서 인력 수급 환경이 악화될 전망이다. 푸드테크의 등장과 식품산업 전 분야에 걸친 적용으로 노동 수요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함. 단순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과 무인화 설비(키오스크 등)의 개발·보급으로 식품산업 전 영역에서 노동 총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러·우 전쟁, 국제유가 및 식품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식품업체의 자본 확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인플레이션은 완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식품 분야 수출기업은 K-Food를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를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내수 위주의 영세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용자사업 등 자본지원정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품산업체가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필요성이 증대될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 등 타 부처 자금 및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됨.
- 정보의 중요성도 강조될 전망이다. 맞춤형 정보 기반 경영 활동의 중요성 증대로 개인 맞춤형 소비, 정보 기반 경영진단 등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임. 유사 업종 및 유사 규모 업체 평균 및 비교를 통한 업체 맞춤형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영 활동 전개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분야에서 시장 및 소비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이미 구축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가공하여 경영자 및 식품산업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반 마련이 혁신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식품산업 내 전 분야에 뛰어들고자 하는 정보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식품분야에 도입되는 ESG 경영은 투자를 통한 자본 확보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직접운용 중 책임투자액은 2015년 6.9조 원에서 2019년 32.2조 원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의 ESG 실천 노력에 따른 책임투자 기회 확대가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단순 책임투자 기회 확대를 넘어 책임투자에서의 ESG 준수의 의무화가 전망됨.
- 한류 문화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수출액, 수출품목, 수출 대상국 측면에서 호조 전망이며, 향후 식품소비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간편식 등 푸드테크의 발전과 함께 미코노미 트렌드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푸드테크는 식품제조, 외식, 유통, 소비, 관련산업에 이르기까지 식품외식산업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푸드테크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25년 3,600억 달러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1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푸드테크의 식품분야 도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후방산업인 농업과의 동반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임.
-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2021.01.14.)하고 자산총액 기준 의무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뿐만 아니라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ISSB)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맞추어 ESG 공시 도입을 준비 중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원칙, 6대 환경목표는 아래와 같이 제시됨(환경부, 202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택소노미 규칙'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술적 평가기준을 법제화하지는 않은 상태임.

〈표 5-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개념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
원칙	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자료: 환경부(2021).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농식품 관련 녹색경제활동에는 저탄소 농업과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2가지임. 더욱이, 식품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활동에 포함된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고기, 곤충원료 등)을 제조하는 활동이 유일함(아래 표 참고). 따라서, 기존의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산업활동 중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식품산업을 통해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차기 가이드라인에 식품산업 관련 활동이 다수 포함되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이 ESG, 택소노미, 지속가능발전목표,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 기준에 맞춰나갈 뿐만 아니

라, 기업과 소비자들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녹색 자금의 유입을 견인하고, 식품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2.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대응 전략 도출(SWOT 분석)

2.1. ‘식품산업 진흥’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식별

-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현황 및 전망에서 다룬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둘러싼 이슈들을 요약하여 강점 (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요인으로 식별하였음.

〈표 5-6〉 식품산업 진흥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S1: 국내 식품산업의 생산역량 보유 S2: 농식품 수출 호조와 신 수출시장 개척 S3: 연구기관·민간 중심 R&D 활성화 S4: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구축 S5: 식품산업 분야별 기본계획 마련 S6: 식품산업 분야별 통계 구축	W1: 국내 식품기업의 영세성 및 낮은 경영 안정성 W2: 농식품 수출에서의 특정 국가 및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 W3: 낮은 국산 농산물 이용률 W4: 푸드테크 관련 기초 R&D 부족 W5: 통계분야 혁신 인프라 부족 W6: 낮은 ESG 경영 도입률 W7: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용률 저조 및 연구개발 기능 부족 W8: 식품기업 단계별 지원전략 미비 W9: 제한적인 원재료 공급망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O1: 소비트렌드 변화 O2: 사회적 요구 변화 및 식품기업의 사회적 역할 증대 O3: 세계 식품시장 규모 확대 O4: K-Culture의 세계적 유행과 K-Food의 인지도 향상 O5: 푸드테크의 등장 O6: 전통식품과 전통주, 지역 특화식품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	T1: 식품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적 외부환경의 악화 T2: 인구사회학적 여건 악화와 노동 공급 및 식품 총수요 감소 T3: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T4: 국내 식품기업에 대한 ESG 경영 도입 압력 가중 T5: 식품 안전에서 식품산업 안전으로의 소비자의 요구 확대 T6: 식품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

2.2.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 도출

2.2.1. 활용전략(S-O 전략)⁶⁾

- 건강과 간편함을 중시하는 식품소비,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증가, 기능성식품 및 가정간편식 소비의 증가, 개인 맞춤형 식품 수요 증가 등 소비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식품산업 생산역량의 효율화, 미래유망식품 R&D 및 해외 수요 증대 품목 개발 독려를 통한 수출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이 필요함.
- 푸드테크의 등장, 사회적 요구 변화 및 식품기업의 사회적 역할 증대, 소비트렌드 변화, 수출 기회 확대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R&D 혁신이 필요함.
- 세계 식품시장 규모 확대와 K-Culture의 세계적 유행과 K-Food의 인지도 향상을 기회로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푸드테크의 등장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 확대를 고민할 수 있으며, 특히 식물성 단백질 및 동물성 단백질의 기초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전략의 중복성 해소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정책 효율화를 통해 지역 특화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2.2.2. 탐구전략(W-O 전략)⁷⁾

- 소비트렌드 변화 및 사회적 요구 변화, 세계 식품시장 규모 확대, K-Food 인지도 향상, 푸드테크의 등장, 전통식품 및 지역 특화식품에 대한 인지도 확대 등 기회 요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식품산업 내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6) 활용전략은 식품산업 내부의 강점을 이용하여 외부적 요건인 기회를 살리는 전략을 의미함.

7)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있어서 탐구전략은 식품산업 내부의 약점(Weaknesses)을 보완하여 외부적 요인인 기회(Opportunities)를 살리는 전략임.

-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 및 중소식품기업을 보호하여 식품산업의 영세성 및 낮은 경영 안정성을 보완하고 푸드테크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 수립을 고려할 수 있음.
- 특정 국가 및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 품목 개발이 필요함.
- 국산농산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가 필요함.
- 푸드테크 분야 기초 R&D를 확대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푸드테크 시장에서의 경쟁력 마련이 필요함. 식품기업의 ESG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국내 식품산업체의 낮은 ESG 경영 도입률을 개선하여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임.
- 통계분야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출기업, 푸드테크 기업,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여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음.
- 원재료 공급망 확보 노력을 통해 식량안보 확보 노력을 제고하여야 함.

2.2.3. 대응전략(S-T 전략)⁸⁾

- 국내외 경제적 외부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전략과 모태 펀드의 확대를 통한 스타트업·벤처창업 활성화가 필요함.
- 인구사회학적 여건 악화와 노동 공급 및 식품 총수요 감소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 확대 및 신 수출시장 확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산업 전반에서는 노동 집

⁸⁾ 대응전략이란 식품산업이 가진 강점(Strength)을 바탕으로 외부적 요인인 위협(Threat)을 최소화하는 전략임.

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피하는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식품 집중 육성 전략이 주효할 수 있음.

-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트렌드 확산 및 식품산업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확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기업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 소비자 신뢰 제고와 안전 최우선으로의 식품산업 체질 개선 등 사회환경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식품산업 환경 구축을 지향해야 함.
- 식품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혁신하여 식품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2.4. 회피전략(W-T 전략)⁹⁾

- 식품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적 외부환경의 악화는 폐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내 식품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모태펀드 확보, 단계적 성장체계 마련,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임.
- 낮은 국산 농산물 이용률과 인구사회학적 여건 악화 및 식품 총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생산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함.
-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트렌드의 등장과 ESG 경영 도입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나 식품산업의 ESG 경영 도입률 및 ESG 관련 지표 마련은 미흡하므로 식품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를 확대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함.

⁹⁾ 회피전략은 대응하기 힘든 약점(Weakness)을 보완하고 및 위협(Threat)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의미

6

제4차 진흥계획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1.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의 기본 방향

1.1. 비전 및 목표

1.1.1. 비전 및 목표(안) 설정

○ 4차 기본계획의 비전: “혁신성장 기반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¹⁰⁾

- 주요 키워드: 혁신, 성장, 푸드테크, 위기 대응, 지속가능
- 의미: 혁신 및 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하에, 지속가능성과 발전(양적/질적 개념) 추구
- 1차 기본계획의 비전: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 일류 식품산업”
- 2차 기본계획의 비전: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

¹⁰⁾ 최초 제안된 비전은 “저출산·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육성”이었으나, 식품업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혁신성장을 달성하고 사회·환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로 수정된 후, 식품업체·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최종 수렴 및 반영하여 도출함.

- 3차 기본계획의 비전: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 제4차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의 목표는 식품산업의 당면과제인 식품산업 매출액 증대, 농식품 수출 확대, 국산농산물 이용 제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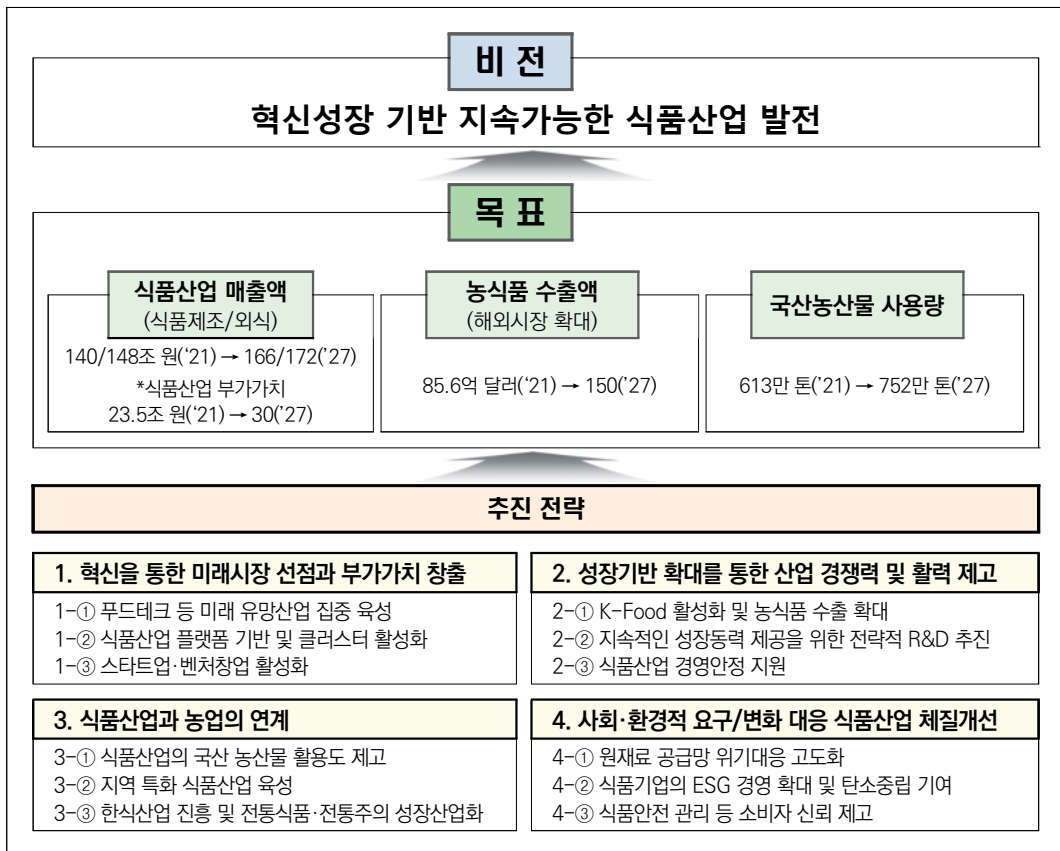
- 식품산업 매출액 목표 : ('21) 140/148조 원 → ('27) 166/172조 원

- 농식품 수출액 목표 : ('21) 85.6억 달러 → ('27) 150억 달러

- 국산농산물 사용량 목표 : ('21) 613만 톤 → ('27) 752만 톤

1.2. 제4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안)

〈그림 6-1〉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1.4. 제3차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계획과의 비교

〈표 6-1〉 제3차 및 제4차(안)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비전, 목표, 주요 과제 비교

구분	제3차 기본계획('18~'22)	제4차 기본계획(안)('23~'27)
비전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혁신성장 기반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산업 매출액: ('15) 210조 원 → ('22) 330 국산농산물 사용량: ('16) 519만 톤 → ('22) 690 식품분야 종사자: ('16) 233만 명 → ('22) 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산업 매출액: ('21) 140/148조 원 → ('27) 166/172 * 식품산업 부가가치: ('21) 23.5조 원 → ('27) 30.0 농식품 수출액: ('21) 85.6억 달러 → ('27) 124.7 국산농산물 사용량: ('21) 613만 톤 → ('27) 752
주요 정책 과제 및 내용	1. 미래 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①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 ②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 지원 ③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④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1.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 1-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산업 집중 육성 1-② 식품산업 플랫폼 기반 및 클러스터 활성화 1-③ 스타트업·벤처창업 활성화
	2.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①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지원으로 혁신인력 양성 ②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③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④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2.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 2-① K-Food 활성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2-② 지속적인 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2-③ 식품산업 경영안정 지원
	3. 식품·외식산업의 균형잡힌 성장 지원 ① 중소식품기업의 성장 사다리 지원 ② 외식업 협업화 지원 및 경영안정망 구축 ③ 식품외식업체 협력, 발전 모델 발굴 및 확산 ④ 지역별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 육성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3-① 식품산업의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 3-②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 3-③ 한식산업 진흥 및 전통식품·전통주의 성장산업화
	4.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①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반 마련 ② 농업인 가공 활성화 및 판매 플랫폼 지원 ③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의 성장산업화 ④ 한식, 음식관광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	4.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 4-①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4-② 식품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4-③ 식품안전 관리 등 소비자 신뢰 제고
	5. 농식품 소비자 신뢰 제고 ①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② 식생활 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 ③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④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 신뢰 제고	

자료: 직접 작성.

2. 제4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안)의 정책과제별 주요 내용

2.1. 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부가가치 창출

증장기 과제	현재 문제점	개선 방향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산업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까지 연간 7% 수준으로 성장할 세계 푸드테크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 R&D 확대 필요 * 국내 2020년 국내 공공 R&D 총 금액은 599,262 백 만원이나, 이 중 배양육, 식물성 대체식품, 식용곤충 R&D 투자 규모는 4,571백 만원에 불과(특히, 식물성 대체식품의 경우 기초연구 예산은 100백 만원) 식품산업의 전후방산업 관련 푸드테크 원천기술 개발이 가능한 학과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 * 타 분야 인재 유입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드테크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차세대 유망 식품산업군 발굴 및 육성 연구개발 비중 확대 신성장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식품산업 플랫폼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트렌드의 빠른 변화, 온라인 식품시장 확대와 식품산업의 디지털화 대응 필요 *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식품산업 시장 구조, 온라인 농식품 시장 규모 (17) 131,542억 원 → (21) 570,897억 원 정보 수요자 입장에서 시장 진입 판단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제한 * 국가 승인 통계 자료는 발표 시차가 존재하여 시의성이 낮음 * 민간 통계 자료는 시의성이 높으나 비싼 가격 등 접근성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플랫폼 구축 분야별 ai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클러스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산업클러스터의 낮은 가동률(70%)과 대규모 업체, 연구기관 부재 * 2019년 기준 분양기업 수 63.6%, 2020년 기준 선도기업 유치 달성률 13.3%(2/15), 중견기업 8.2%(7/85) 식품산업클러스터의 저조한 기업 육성 능력 * 벤처기업 매출액('19년 전년대비 증감률 1.1%) 낮은 연구개발 능력 * 입주 연구기업 전무 입지 문제를 고려한 방안 마련 필요, 수출기업 육성에 열위 * 제조기업의 인력 수급이 어렵고, 제품 판매를 위한 유통 환경 열위 * 해외 수출 기업의 경우 항구까지 거리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중간평가 수행 시장과의 거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연구개발 등 기업지원시설 중심의 기능 개편 수출 클러스터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조성 고려
스타트업·벤처 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악화에 따른 모태펀드 감소 * 정부 모태펀드 예산 (21) 1조 700억 원→(22) 5,200억 원→(23) 3,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

2.1.1.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산업 집중 육성

◇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미래유망산업의 지속적인 발돋움 통한 부가가치 창출

- * 푸드테크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 * 차세대 유망 식품산업군 발굴 및 육성
- * 신성장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가. 푸드테크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엄밀한 정의/전망에 근거한 전략 수립 필요]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명확화, 국내외 시장에 대한 면밀한(보수적인) 진단, 향후 성장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해 근거에 기반 명확한 식별, 이를 통해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푸드테크 발전방안, 식품 R&D 정책 등)

- 푸드테크 산업에 대해서 정부, 학계, 산업에서 많은 관심이 있으나, 푸드테크 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음. 푸드테크 산업을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 국내외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임. 시장 잠재력이 확인된 범위 내에서 공공의 영역이 활성화시킬 때 효과적인 푸드테크 영역을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정책 및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푸드프린팅, AI·로봇, 마이크로바이옴, 스마트푸드팩토리, 대체육/배양육, 첨가물/조미식품에 대한 기술[당류/나트륨 저감하면서 맛 유지] 등에 대한 분야별 면밀한 검토와 집중적 활성화 필요)
- 식품 분야 R&D 정책과 연계하여 푸드테크 관련 시장 수요 판단 및 대응
- 외식 분야에서는 조리·서빙로봇, 배달로봇 및 드론 분야 검토 필요

○ [유망 푸드테크 부문 혁신기술 선도기업 집중 지원]

- 유망 부문 선정 및 혁신기술 선도기업에 대한 엄밀한 선정 및 집중 관리, 우수사례 홍보 및 전파(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 등에서 별도 섹션 마련)
- 자금/시설지원: 우수 푸드테크 창업기업 대상 자금지원 및 업체당 한도/기간 확대(푸

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고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지원(식품벤처센터, '23년 준공 예정 청년식품창업센터 등), '(가칭)푸드테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자와 푸드테크 기업의 정보 교류 활성화

- 융복합 우수인력 확보: 대학 연계 푸드테크 융복합 우수인재 맞춤형 육성(기업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성 있는 푸드테크 부문별 맞춤형 인재 육성, 대학원 과정 포함, 기존 푸드테크 계약학과 확대 운영), 해외 푸드테크 우수인력 유치 지원, 우수인력 활용 푸드테크 기술 컨설팅 지원

○ [푸드테크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 '(가칭)푸드테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푸드테크 혁신기술(또는 아이디어)을 보유한 기업과 생산기반을 갖춘 기업을 연결하는 기술(또는 아이디어)교류 및 사업화 지원
- 비즈니스 모델 수립, 제품화 지원, 국내외 관련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정보 제공,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시설 활용

나. 차세대 유망 식품산업군 발굴 및 육성

○ [유망 식품산업군 선정, 집중 육성] 인구·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여 1) 건강 관련 식품 산업, 2) 고령친화식품/메디푸드, 3) 펫푸드, 4) 대체식품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의 빠른 진전, 소비여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 건강에 대한 전 소비 연령층에서의 관심 확대, 펫푸드산업의 낮은 국산 비율,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사회적 필요성 제기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정책적인 육성 노력이 요구되는 산업을 **선택적으로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

- 3차 진흥계획(2018) 이후 발표한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2019)”에서 유망 식품산업으로 1) 맞춤형/특수식품, 2) 기능성 식품, 3) 간편식품, 4) 친환경식품, 5) 수출식품을 선정한 바 있음. 3) 간편식품은 이미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고, 산업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4) 친환경식품

분야는 식품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친환경 농업정책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5) 수출식품 분야는 K-Food 수출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다루어져야 할 것

- 기존의 '맛춤형/특수식품'을 '고령친화식품/메디푸드'로 유지·계승하고, '기능성 식품'을 '건강 관련 식품'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유지, 펫푸드¹¹⁾와 대체식품을 별도로 추진

○ **[건강 관련 식품산업 육성]** 건강 관련 식품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1)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육성(계속), 2)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확대 추진, 3) 건강식품특화단지 조성 및 성장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산업 육성의 방향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유형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수입 대체를 도모하고 해외 수출 또한 견인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¹²⁾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소재/원료 발굴, 기능성 규명 및 정보 공유(DB 확충), 국산 원재료의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완료 및 효율적 운영 및 활용방안 마련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규제 개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 등) (참고: 일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 건강식품특화단지(예: 당뇨식품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다양한 환자군의 식생활을 지원하고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임. 더불어, 해당 식품군을 수출 산업화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

○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 고령친화식품 육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산업들은 현재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실질적 수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여러 시장의 상황이 고령친화식품 수요곡선이 상당히 비탄력적일 것이

11) 펫푸드는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으로 볼 수 있으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임. 식품산업 진흥의 영역에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2) 2022년 기준 매출액이 4.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1년 1조 3,682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수입 역시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1조 2,568억 원의 건강기능식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수입 1위 품목유형은 복합영양소제품으로 3,087억 원어치를 수입했으며, 당으로 영양소, 기능성복합제품(2,345억 원), 개별인정원료(1,584억 원), 프로바이오틱스(1,444억 원), EPA 및 DHA 함유 유지(960억 원) 순임.

라고 예상하게 하고 있어¹³⁾, 단기적으로는 수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수요곡선의 이동과 변화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활성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기 및 중장기적 활성화 전략 이외에도 시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수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1) 고령친화식품의 필요성/우수성을 강조하고, 친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1) 식생활교육과 연계를 통한 필요성 강조, 2) 소비자단체와 연계를 통한 전국단위 홍보 활성화(숯폼 영상 등 활용), 3) 고령친화제품체험관에 고령친화식품 도입 및 적용 추진, 4) 고령친화식품 섭취를 통한 영양/건강개선을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홍보, 5) ‘고령친화우수식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6) 고령친화식품 리네이밍(공모전 등을 통한) 인지도/친밀도 개선, 7) 공공수요와의 연계 강화(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개선, 장기요양시설 평가 점수에 고령친화식품 사용 여부 반영,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 등과 연계 모색) 등이 필요
- 생산, 유통 및 경영활동 관련 활성화 전략으로는 1) 고령친화식품 관련 종합플랫폼 구축 및 고령친화적 온라인 판매 페이지 설계 지원, 2) 공공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활용한 판로 제공, 3) 고령친화식품에 특화된 식품 R&D 설계 및 지원, 4) 고령친화식품산업협회 설립 지원 및 한국식품산업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는 1)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고령친화식품의 정의와 범주의 명확화, 2) 산업 분류체계 마련 및 엄밀하고 지속적인 통계의 생산, 3) 종합적인 정보제공/교류 플랫폼 운영, 4) 초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우수제품 지정 업무 탄력적인 운영 등이 필요

13) 제품수명주기에 따르면 제품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뉘는데, 현재 고령친화식품시장은 매우 초기적인 단계에 있음. 도입기의 경우 신제품 수용도가 높거나 제품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인식하는 소비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가격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며, Auer and Papies (2020)은 메타분석을 통해 도입기의 가격 탄력성이 다른 시기에 비하여 비탄력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Steinhart G(2019)에 따르면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가지로 시장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제품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지, 대체제의 존재 여부, 상품 교체 가능성으로 정의함.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시장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여러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 비교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대체제도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것으로 판단됨(김상호 외, 2021).

- [대체식품산업 육성] 대체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1) 원료의 국산화(textured vegetable protein), 2) 식물성 단백질 자원의 안정적 확보 노력(고단백 대두 및 완두), 3) 배양육 생산활동에 대한 산업적 정의 명확화(제조업 vs. 농축산업) 및 관련 법령의 정비(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4) 신규식품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 5) 관련 식품 R&D의 확대, 6) 대체식품에 대한 정의, 식품유형, 기준 규격 및 관리체계/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7) 대체식품산업의 (건강)기능성식품과의 연계 등임.

다. 신성장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 충족, 다양한 신제품의 소량 생산, 제조-서비스 융합 확대 등으로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공정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신속한 산업분류 반영 및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 신산업 분야는 기초자료 구축,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
-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규제요인 개선
- 신성장산업 혁신 기반조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확대,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방안 발굴
-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신성장산업 기지 기반으로 확장

- 푸드테크 관련 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 수출대상국과 규제 조건/현황 등에 대한 communication 라인 구축하여 제품 개발자가 현지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실시간 파악 가능하도록 지원
- 주요 수출국에 대한 대체식품 관련 소재의 식품 규제 정보 수집 및 관련 업체 정보 제공
- 대체식품 수출 관련 컨설팅 등 전문기관 자문 지원
- 식물성 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건강적인 이점을 표현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2.1.2. 식품산업 플랫폼 기반 및 클러스터 활성화

- ◇ 식품산업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정보 제공 플랫폼 연계
 - * 식품산업 신산업 분류기준 정립 및 통계 정비
 - * 식품기업의 생산, 유통, 수출 등 각종 정보공유 플랫폼 및 데이터 관리 통합조직 구축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재정비를 통한 안정화 및 내실화
 - *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개선과제 관련 연구 추진
 - * 산학연 연계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혁신을 창출하는 식품 연구산업단지 조성
 - * 식품기업에 대한 상시 애로 대응 시스템 구축

가. 디지털/데이터 플랫폼 기반 마련

- [정보 인프라 구축]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사**를 추진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식품산업 **분야별 정보 제공 강화**
 - 다양화된 수요에 부합하도록 **정보 다각화·고도화** 추진을 통해 **국내 정보 공급**
 - 식품·외식산업 **통계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식품·외식기업 등에 제공하는 식품 산업 정보분석 사업의 축적된 결과를 토대로 **식품분야 빅데이터 구축**
 -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라 아세안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DB(농식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정보 조사 및 전파)를 확충하고 수요자 참여형 정보조사 확대를 통해 **해외 정보 공급**
 - SNS,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상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기능 확대를 통한 관계부처 연결 기능 강화
- [식품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농업과 식품산업의 생산, 유통, 수출, 지원정책 등 경영 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공유를 통해 전에 없었던 기회 및 시너지 창출
 -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술 투자 과정에 **공적 재원 투입**이 가능

- 산·학·연이 보유한 **농식품 원료, 특화 기술, 장비, 전문인력** 등 정보를 **집적화·공유**하여 식품기업이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오픈 플랫폼** 구축
- 기술 공급 기업(스타트업 등)과 기술 수요 기업(대기업 등), 농업 생산자와 국산 농산물 수요업체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통해 **탐색비용 없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기관들의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중소벤처24**’ 등 정보 보유기관의 **정책 정보 연계**와 관리 및 통합을 유도
- **식품 손실 감소와 과다자원 재배분: “앱(app)”경제 활성화**를 통해 유통기한 만료가가까운 식품의 가격을 즉각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제고**
- **수출기업 맞춤형 통합솔루션**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분석으로 수출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
- 통합솔루션 구축 후 고도화를 통해 신규 바이어매칭, 시장다변화, K-Food 상담장 메타버스까지 구현 등 **aT 수출지원사업의 디지털 전환**

○ **[식품 디지털 통합 플랫폼 활성화]** 생산과 소비, 기업과 인력, 기술과 소재, 자원과 장비, 기술과 기술 등이 플랫폼을 통해 만나 **시너지가 창출되는 융복합 우수사례** 홍보

- 온라인 **비대면 연결성 확장**으로 **시너지 창출 기회 확대**
- 대한민국식품대전, 푸드테크 산업대전 등 박람회를 통한 **오프라인 연결성 구체화**
-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플랫폼 **활용도 확대**

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 **[진단과 평가]**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2012~2025)의 객관적이고 엄밀한 **진단 및 평가, 개선과제 도출 필요**

- 최우선 과제로 2023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진행 과정 중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산업의 진흥에 있어서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 수행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R&D 기능 수행 강화 및 활용 강화 방안 모색

○ [산학연 연계 강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1단계 사업의 안정화 및 내실화를 통한 산학연 연계 강화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 독려를 위해 식품문화복합단지 조성
- 푸드테크를 중심으로 미래유망식품분야(기능성, 바이오, 고령친화/메디, HMR/대체)에 특화된 연구 기능 강화
- 5G 이음망을 구축하고 식품 분야 스마트 실증단지 구축(과기부 협력)
- 구축된 시설 및 장비, 교육·물류·마케팅 서비스 지원 대상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에서 ‘국내 전체 식품기업 및 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국내 식품산업 성장 거점 역할 수행
- 창업(컨설팅, 시제품제조), 벤처(공장임대, 설비공유), 투자유치기업(기술, 마케팅, 인증) 등 성장 단계별 세분화 된 전주기적 지원 확대 및 상시 애로 대응 시스템 구축

○ [연구중심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인프라와 산학연이 연계, 시너지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혁신을 창출하는 식품 연구산업단지로 조성

- 연구시설부지에 ‘(가칭) 공공 R&D센터’를 구축, 입주기업과 클러스터의 기업지원시설·장비와 연계·운영하는 R&D 체계 확립
- 농식품 분야 창업자들이 산학연 네트워크의 장비·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 제공, 전문교육, 기술 지원 및 취업 연계
-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www.fmis.kr)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식품소재의 기능성 정보 통합 제공을 통해 정보접근성 강화
-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을 통한 기능성 원료 제공 인프라 확충

- [인력 양성] 청년식품창업LAB을 활용하여 식품산업 고급 인력 양성 역할 수행
 - 청년식품창업LAB의 가동률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고급 인력이 부족하고 푸드테크 관련 혁신 인재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확대 필요**

- [지역 중심 특구] 지역 중심의 특구 사업 확산 및 특구와 연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이용 확대
 - 각 특구에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 관련 기능 부여
 - 벤처·스타트업 및 푸드테크 제품 및 소재 **개발 활성화가 선행된 지역 중심 클러스터/특구 지정**
 - **건강/질병** 관련 클러스터/특구 조성
 - 수출 여건이 좋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출 특화 특구/클러스터**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국제 식품기업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조성된 **글로벌 존에 국내기업 투자 허용** 후 분양면적이 대폭 증가
 - 클러스터 내 물류업과 **식음료제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존재**하므로 산업용지 중 연관업종·음료제조 용지를 **식음료제조 및 물류 용지로 변경** 필요
 - 이를 위해 **고시개정**이 필요(「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내 토지이용계획(의산국토관리청)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자부))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설 및 장비는 입주 기업에게만 실증테스트 등을 목적으로 허용되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개방형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여 **입주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전면 개방** 검토
 - **법인세 감면** 등 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을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지속 추진

2.1.3. 스타트업·벤처창업 활성화

◇ 식품 스타트업·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달성하고 산업의 활력을 제고

- * 식품 스타트업에 대한 신중한 정책 결정 필요
- * 식품창업의 세분화 및 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
- * 기존 정책 연계 지원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가. 식품 스타트업에 대한 신중한 정책 접근

○ [스타트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진단 선행될 필요] 우리나라 푸드 스타트업의 경우 높은 수준의 식품기술이 적용되기보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많아 사업의 지속성 및 경쟁력에 한계를 보이는 현실임. 따라서,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절차 이후에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할 것임.¹⁴⁾

- 푸드테크를 적용한 푸드 스타트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체식품이나 IOT 등 높은 수준의 R&D를 장기간 진행하는 사업 대신 외식 관련 서비스업 또는 단순 식품가공업의 창업 비중이 높음.
- 그 결과 단기적인 산업 규모의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시장 진입이 쉬운 산업 특성으로 이미 레드오션(red ocean)에 진입하였다는 평가
-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의 식품산업 창업도 많은 편인데, 이는 다른 부문에 비해 소규모 자본 투자로 사업화가 쉬운 특성에 따른 결과로 추정

○ [적극적 탐색과 집중 육성] 찾아오는 스타트업들을 단순히 지원하는 수준에 급급하기 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푸드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접근이 필요함.

- 식품분야 융복합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혁신 푸드 스타트업 발굴단’ 가동 고려

¹⁴⁾ 1인 가구 증가 및 식품소비 트렌드의 다양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푸드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임. 서울시는 가락시장(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롯데마트 등과 협업하여 서울먹거리창업센터를 통해 푸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청년 밀키트 창업을 지원

나. 식품창업의 세분화 및 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

○ [부문별 차별화된 육성 전략 수립] 푸드 스타트업을 포함한 식품 창업의 유형과 하위 산업을 구분하여 해당 부문별 차별적 육성 전략 설정

- 식품 창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 정립
- 유형별 창업 모델을 설정한 다음,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운영
 - * Group I의 식재료·외식 상품 유통업의 경우 ICT R&D 지원을 하되 추가적인 창업 지원은 최소화
 - * Group II의 산업 중 유망성이 인정되는 산업을 대상으로 중기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표 6-2〉 우리나라 푸드 스타트업(협업)의 유형

구분		세부 유형
Group I	식재료·외식상품 유통	음식 배달 및 주문, 식재료 배송 및 주문, 식당 좌석 예약 및 메뉴 선주문, 모바일 식권 및 식당 무인 주문
	식품 관련 콘텐츠	맛집 정보, 레시피 공유, 먹방·쿡방, 식품관련 빅데이터 분석, 푸드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외식 창업	키친 인큐베이터, 푸드 트럭, 기타 아이디어 외식 창업
Group II	식품 및 관련 상품 생산	대체식품, 곤충식품, 식용 용기(빨대, 컵 등), 기타 기술 적용 식품가공 창업
	4차 산업 기술 중심 산업	스마트 키친(AI, IoT), 인공지능 요리사(로봇 요리사), 로봇 배달, 3D 푸드 프린터

주 1) Group I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일정 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당분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군

2) Group II는 우리나라에 시장이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군
자료: 김성훈 외(2018)

○ [민간 투자 시장과 연계 활성화] 미래 유망식품 분야 스타트업은 자유경쟁을 통한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투자 시장의 활성화 및 투자 시장과의 연결이 최우선 과제임.

-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청년창업 지원 및 컨설팅 확대 차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하여 제품생산까지 연계 가능한 푸드테크 기업의 청년 창업 및 성장 지원
- 스타트업에 대한 모태펀드 지원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 중심의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
-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줄이면 민간 출자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초기 스타트업 지원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모태펀드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 형태 투자방식인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 검토
- 정부는 어떻게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 필요

〈표 6-3〉 모태펀드 분야별 개선방안

목적	대상	실천방안	내용
초기기업투자	푸드 스타트업	직접투자 도입	초기 단계 기업(스타트업) 및 지방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 검토
일자리 창출	푸드 스타트업	융복합 투자 도입	지역 개발에 대한 융복합 투자 고용 증대에 대한 융복합 투자 * 회수가 가능한 융복합 투자방식이 핵심
민간자본 유입	푸드 스타트업	민간 모태펀드 도입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법적 개정
스케일업 강화	중기 기업	스케일업 펀드 도입	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
해외진출 유도	수출기업	특수 목적 펀드 도입	해외 모태펀드와의 전략적 제휴
푸드 스타트업	혁신기술 푸드 스타트업	특수 목적 펀드 도입, 엔젤투자, 클라우드 펀딩 유도	푸드테크, 푸드테크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투자

자료: 전성민(2020)

다. 기존 정책 연계 지원 및 부처간 협력 강화

○ [푸드플랜과 푸드 스타트업 연계]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점 사업인 푸드플랜에 푸드 스타트업을 접목시켜 사업 간 시너지 창출 필요

- 푸드 스타트업의 경우 영세사업자 시장을 테스트하는 단계를 거치기에, 초기 사업화를 위한 시장 기반으로 푸드플랜 생태계를 적극 활용
- 도시형 푸드플랜 지자체나 복합형 푸드플랜 지자체의 경우, 원물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서 나아가 가공식품이나 식품 서비스업 등의 부가가치 창출 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정책이 제대로 도입되고 있지 않아 푸드 스타트업을 접목시킬 필요

○ [타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공모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연계하여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산자부는 전국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공모하여 지정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사업 아이템으로 식품산업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부처 간 협업사업으로 활용

2.2. 성장기반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및 활력 제고

중장기 과제	현재 문제점	개선 방향
수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식품소비 시장의 성장 정체 및 고령화로 인한 식품절벽 발생 전망으로 수출 확대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고령화율은 20.3% 전망, 1인 가구 비중 32.3% 전망 * 가구당 실질 식품 지출액은 70만 원 수준에서 정체 • 유사한 수출국을 대상으로 원물, 가공도가 낮은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국가에 편중된 수출: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이 2016년 이후 상위 개 국가, 아랍에미리트는 2018년 이후 5위권에서 벗어남. * 가공도가 낮은 품목 중심: 최근 7년간 참치, 김, 음료, 라면, 커피제조품 등이 수출 상위 품목임. •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수출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키트, HMR 제품으로의 품목확대가 필요하나 현지 유통과 검역상 애로사항이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진흥계획에서는 ASEAN 국가들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유럽/무슬림 국가들로 관심을 옮겨 집중 개척 • 기존의 수출국가 중에서도 교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까지 수출 확대 노력 필요 • 해당 국가 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산자원부 협상과정에 농림축산식품에 대한 통관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방안 마련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분야 R&D 혁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기준 공공 R&D 6,928건으로 증가 추세 * 식료품 분야의 제조업 혁신율은 14%로, 전체 20.6% 대비 낮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선정과 집중적 투자를 통한 R&D 추진 • 식품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추진 • 세계 식품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R&D 추진
경영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물가 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 원자재 수급 불안, 시장 축소 전망 • 코로나로 인한 높은 폐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기준 폐업 업체 수 3,524개 업체(전년 3,329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별 경영안정지원정책 마련

2.2.1. K-Food 활성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미래유망산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 미래 수출 전략 품목 및 대상 국가/지역 발굴
- *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 한류열풍 활용 K-Food 마케팅 강화 등 마케팅·물류·검역 부문 지원 강화
- *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 강화
- * 글로벌 외식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가. 시장 및 품목 다변화: “미래 수출 전략 품목 및 대상 국가/지역 발굴”

○ [품목 및 대상국가 다변화] 딸기·포도와 같은 제2의 스타품목을 발굴하여 수출 견인을 도모해야 함. 1) 품목 및 대상 국가 발굴 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 제고, 2) 기수출지역의 수출량 확대(기수출국가의 미수출지역 개척 등을 통해) 및 미수출국가 대상 개척 노력(한류 마케팅 확대)¹⁵⁾, 3) 제2의 스타품목 발굴을 위한 마켓테스트 및 해외 바이어 초청 확대, 4) 해외 시장 및 해외 소비자/바이어에 대한 정보제공 다각화 등이 필요함.

- 국내 농식품 수출 전문가, 해외바이어, 국내식품기업 수출담당자, 정책담당자, 학계/연구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정기적인 회의, 체계적인 발굴 절차를 거쳐 스타품목 및 미래 잠재 수출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품목 및 국가에 기업적,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로는 동남아시아가 35%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 중국, 유럽이 12%를 차지함. 다음으로 일본이 9%로 후순위를 기록함. **4차 진흥계획에서는 ASEAN 국가들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유럽/무슬림 국가들로 관심을 옮겨 집중해야 하며, 기존의 수출 국가 중에서도 교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까지 수출 확대 노력 필요**

¹⁵⁾ 식품기업 대상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4.2%에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기존 농식품 수출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더 많은 수출수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임.

- 수출 품목 발굴과 관련해서는 1) 스타품목인 딸기/포도의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일본 국가들의 부유층을 타겟으로 하는 수출안정화가 필요하며, 2) 김치, 장류(전통식품), 발효/건강식품, 식재료 쪽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 또한 요구됨. 3) 차세대 스타품목으로 대체육, 밀키트, 간편식 수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4) 마지막으로, 이제까지는 상온 1차가공, 음료, 인삼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가공도가 높은 품목(가공식품, 냉장/냉동만두, HMR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함.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물류/첨가물규제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
- ‘미래클 K-Food 프로젝트’, ‘전략품목육성사업’의 확대 추진(품목 및 대상 국가 선정에서 변화에 유연한 대응)

나.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재무불확실성 해소 노력] 농식품 수출업체가 고비용 시대에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자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운영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 예상치 못한 교역환경 변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물류난 등의 상황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식품업체들을 중심으로 용자지원사업 혜택 필요(피해기업 등 가장 필요한 업체들 중심으로 집중적 지원 전략 필요)
 -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불확실성에 노출되었을 때, 다양한 보험상품을 통해 리스크를 헷지(hedge)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보호 필요(수출보험 상품 개발 및 수출보험 가입 홍보 강화 등)
- [조직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통합·선도조직, 수출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업,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운영방식의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어려운 글로벌 교역환경 속에서도 2021년 신선식품 수출액이 약 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함.
- 1) 우수 단지 및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미흡한 단지에 대한 면밀한 원인진단 및 컨설팅 추진, 2) 신규 단지/조직 조성 초기 단계 조직화 교육 강화
- 우수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미흡한 단지에 대한 원인진단 및 컨설팅
- 생산 및 수출량 입력 등 데이터 연계 및 활용도 제고(FTA Agri 등)
- 신규 수출통합조직 결성 추진(계속) 및 확대, 개별 조직의 운영 내실화 지원
-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육성 및 수출협의회 운영은 핵심적 수출진흥정책으로 그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개별 조직 및 협의회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가동하여 수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
- 전문생산단지 또는 수출통합조직 운영과 관련한 수출전문인력 육성도 병행될 필요

다. 한류열풍 활용 K-Food 마케팅 강화 등 마케팅·물류·검역 부문 지원 강화

○ [다부처 협업사업 확대 추진] 문체부 등과 협업하는 다부처 사업 및 한류 마케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K-Food를 효과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국내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한류 콘서트/드라마 지원, 범부처 한류산업과 연계(K-브랜드 공동홍보 등)

○ [비대면시대 한류와 온라인 마케팅 연계] 비대면시대 온라인 홍보를 통해 한류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농식품 수출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온라인/화상 수출 상담, 온라인 홍보, 온라인 판로 비중 확대
- 전문 유튜브 양성 및 지원을 통해 온라인 박람회 활성화

○ 국제박람회, K-Food Fair, 소비자체험홍보, 바이어 거래 알선,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홍보사업 모두 실적이 우수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사업들의

정량적인 수출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해외 판촉 및 온라인 판촉 사업, 판매플랫폼 구축지원 사업,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사업, 뉴미디어마케팅, 온라인페어 개최 사업도 K-Food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물류 효율화 사업 등 지속 추진
 - 공항/항만 인근 저온저장고 제공을 통해 냉장/냉동제품 수출 확대 도모(동남아 지역 콜드체인 확장 추세)
 - 항공공동물류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필요(신규노선 발굴, 수출선 확대 필요)
 -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사업 확대 추진(품목 확대, 수혜대상 업체 발굴 노력)
 -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운영
 - 물류난/선박난 재발 대비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검역 인력 증 수출인력 확충을 추진하여 EU 등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예: EU 육류 수출).

라.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 강화

- 해외 식품 시장 및 소비 트렌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트렌드 발굴 및 해외 시장 정보제공 시스템이 고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수출 관련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팀 구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수출업체 맞춤 조사 지원), 수출대상국별로도 마찬가지임. 맞춤형 ‘현지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수출대상국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1차, 2차 벤더들에 대한 ESG 경영 관점의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화 지원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인 대응 필요

- 비관세장벽 관련 조사사업이 신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국가별로 정리하여 실시간 제공, SNS 등을 통한 전파, 현지화 지원 등)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상시 원스탑대응팀을 신설하여 비관세통상장벽에 실시간으로 대응
- 국가별 시장 및 소비자의 특징, 국가별 비관세장벽에 대한 수출전문인력 육성 병행 필요
- 수출과 관련된 플랫폼 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케이푸드 트레이드)

○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수출바우처사업 및 수출컨설팅은 더 비중 있는 핵심 정책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수출바우처사업에서는 현재의 수출실적은 낮지만, 수출잠재력이 뛰어난 소규모 수출업체들에 대해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수출상품화 지원’,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우수 농식품 패키지 지원’에서도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참여업체의 선호, 니즈와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

마. 글로벌 외식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 외식기업 해외진출 애로사항¹⁶⁾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단계별 준비 상담 및 현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해외진출 총괄 데스크’와 국가별 ‘현지지원센터’ 설치·운영
- 전문 컨설팅 기관과 협력하여 예비진출부터 현지화에 이르는 단계별 상담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 해외 바이어 매칭 지원 및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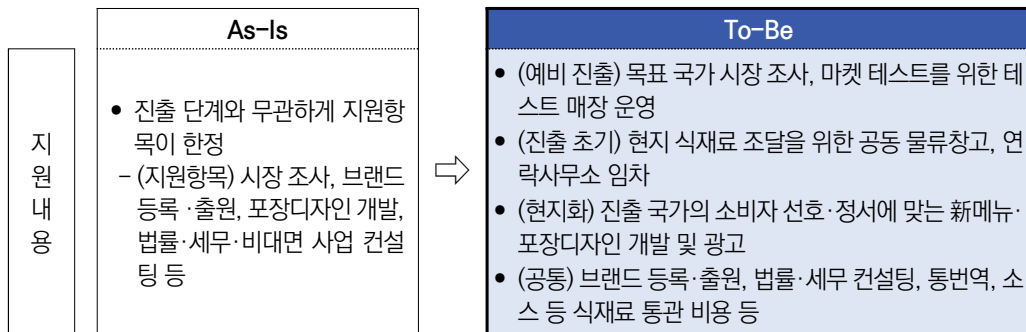
- 진출 희망 국가별 최신 파트너社·바이어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매칭 지원

¹⁶⁾ 규제 정보 부족, 통관 기준·절차, 한국산 식재료 공급망 부재, 시장정보 부족, 현지 인력 모집·운영 등

-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의 국내 외식 브랜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진출 유망 국가 대상 현지 홍보¹⁷⁾ 강화
- 해외 주요 언론사·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 대상 국내 외식 브랜드 외국어 홍보자료 발간·배포
- 항공사·여행사와 외식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방한 외국인 대상 국내 외식 브랜드 홍보

○ 해외진출 바우처 사업의 개선을 통한 진출 방식 다변화, 안정적 초기 정착 및 현지화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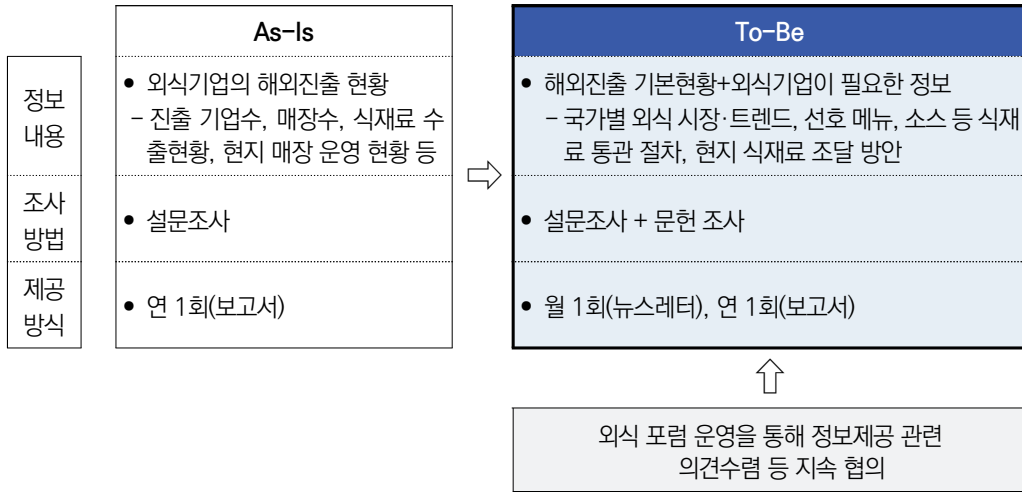
- 해외진출 바우처 사업('22년 2.5억 원): 해외진출 희망 외식기업에게 시장개척, 브랜드 홍보, 전문 컨설팅 등 지원(24백만 원/개소, 10개소 지원)



○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연 1회 → 월 1회), 정보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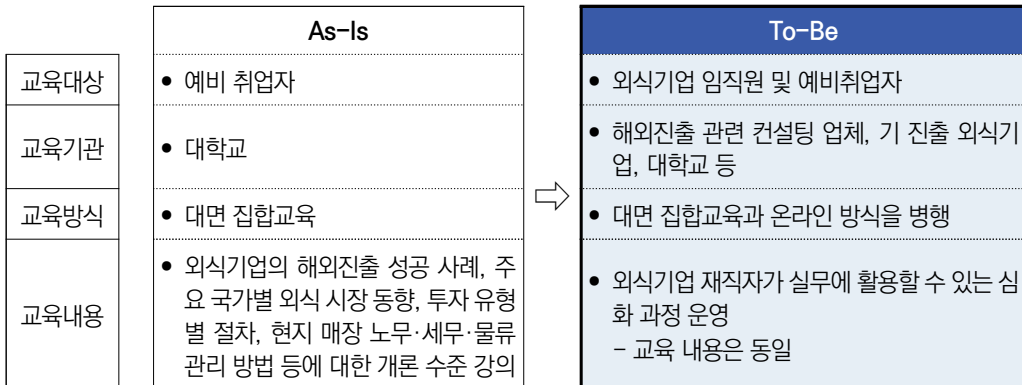
- 국가별 외식시장 동향, 소비자 선호 메뉴, 식문화, 식재료 수출 통관 정보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 신규 제공(뉴스레터+보고서)
- 진출 국가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新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진출 유망 국가의 외식 트렌드, 식재료 통관정보 등 제공

¹⁷⁾ 한류 콘텐츠(K-POP, K-무비·드라마 등) PPL, 해외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



○ 교육을 통해 중소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진출 활성화

-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개선하여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실무에 도움이 되는 심화과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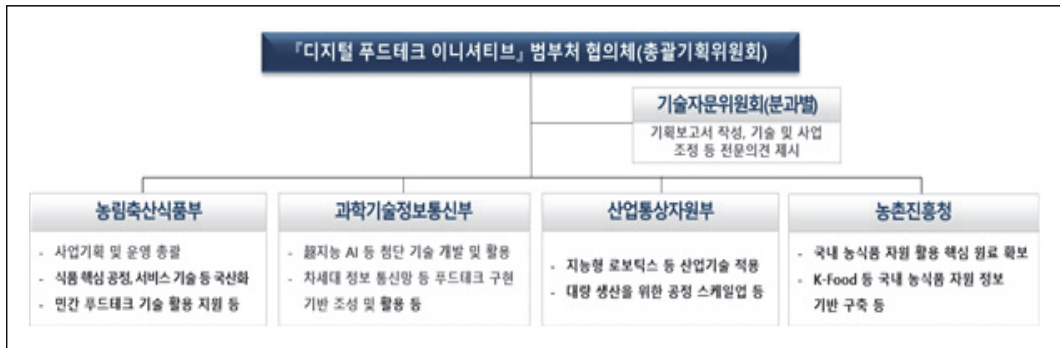
2.2.2. 지속적인 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 ◇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타 부처 연계 및 오픈형 R&D 추진체계 구축
 - * 체계적 선정과 집중적 투자를 통한 R&D 추진
 - * 식품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추진
 - * 세계 식품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R&D 추진

가. 체계적 선정과 집중적 투자를 통한 R&D 추진

- [국가 식품 R&D 거버넌스 구축] 국내 식품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민간의 디지털 기반 ‘푸드테크’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디지털 푸드테크 이니셔티브)’ 조성
 - 기술분야(안): 스마트 제조/유통, 식품 커스터마이징, 외식 푸드테크, 3D 푸드 프린팅 등
 - 가공에서 유통·소비까지 디지털 기반의 푸드테크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부처별 강점을 고려한 **협업 방안** 마련하여 **범부처 협의체 구성**

〈그림 6-2〉 범부처 협의체(안)



- [민간 주도 연구 강화] 핵심 분야별 초기 기술~고도화까지 단계별 R&D를 민간 주도로 추진
 - 기업이 가진 기술 전략에 대한 정부 R&D 과제 선정을 전제로 민간기업의 투자협약,

정부는 R&D 과제 선정 시 **협약 실적, 기술 전략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①자율주제 R&D, ②투자연계형, ③스케일업(핵심기술 보유 및 고도화 단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식품산업 전 분야 R&D 확대

○ [R&D 확대를 위한 세액 공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른 ‘신성장·원천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관련 산업계 신규 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세액공제 확대 지속 추진

나. 식품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추진

○ [노동생산성 제고] 단순노동·위험업무 로봇 대체를 통한 **인력 부족 해소** 및 식품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

- 식품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를 위한 R&D 추진
- 식품제조업의 공정 관리를 위한 센싱 기술, 판단/제어 기술, 외식업의 주방 보조, 식재료 관리 자동화 등 식품 스마트 제조 기술 개발

○ [개방형 R&D 추진] 식품 스마트 제조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및 타분야 연구 협력 다변화 필요

- 공정모니터링, 품질 검사 등 복합·다중 센서 고도화(과기부)
- 디지털 푸드센서, 가상제조 환경 구축 등 초지능형 AI 및 디바이스 개발(과기부)
- 고위험, 노동력 과투입 공정 대체 로봇 개발(산업부)
- 공정관리를 위한 판단/제어 기법 확립(과기부/산업부)
- 공정작업을 위한 협동 기술 및 공장 단위 스케일업(산업부)
- 보급형 식품공장 맞춤형 공정 개발 및 현장 확산(농식품부)

○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개발 추진] 식품 소재·설비 기술경쟁력 확보 및 현장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식품 제조·설비 첨단화 및 관련 센서·부품 국산화 지속 투자

- 수입 의존적 식품 소재·설비 관련 국내 자체 기술개발
- 수출 제품화를 위한 최적 가공기술 개발
- 식품 생산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다. 세계 식품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추진

○ [K-food 경쟁력 강화] K-Food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식품 품질·안전관리 및 가공기술 고도화

- 식품 품질 개선 및 유지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
- 식품 보존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

○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K-food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ESG, 지속가능성 등의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술 개발(스마트 푸드 패키징)이 필요

- K-food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ESG, 지속가능성 등의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술 개발(스마트 푸드 패키징)이 필요
- 환경 부담 경감을 위한 친환경 식품 포장 기술개발
- 포장 폐기물 감량 기술개발
-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 소재 대체 기술 개발
- 지시계, 센서 등 지능형 포장 제품화 기술개발
- 스마트 라벨 기반 지능형 포장 기술 식품산업 적용
- 비대면 사회 대응과 가정간편식 적용을 위한 기능성 포장 기술개발

2.2.3. 식품산업 경영안정 지원

◇ 식품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체계를 확립

- *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
- * 생산시설 현대화 및 노후 장비 교체 지원
- *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가.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

- [국산농산물 구매 지원 지속 추진]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의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외식업체 육성,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의 농식품 원료구매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 지원
 - 식품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는 업종에 따라 유사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식품산업체를 유형화하여 원료 수요를 조사, 공동으로 원료를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원료 공동 구매 지원
- [직거래 활성화]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 등과 생산자조직 간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품목별 수급 및 구매처 정보 제공으로 계약재배 등 직거래 활성화
 - 식재료 직거래 확대를 위해 중소식품제조/외식업체의 eaT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 참여 유도
 - eaT 시스템 이용 방법 및 용가지원 내용과 온라인거래소(On-KAFEX) 식자재물 이용 방법 및 비용 절감 사례 홍보
 - 산업부의 프랜차이즈 정보시스템('22년 말 구축완료 예정)과도 B2B거래 플랫폼을 연계하여 통해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의 접근성 확대

나. 생산시설 현대화 및 노후 장비 교체 지원

- [시설현대화 지원] 농식품시설 현대화 사업, 중소식품기업육성사업, 외식업체육성자금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의 성장 발판 마련

- 스마트공장, 자동화 등 설비지원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
- 가스레인지, 주방 환기설비, 자동소화설비 등 노후 설비 등 교체 및 개보수 지원
- 유희시설 임대·공유 등 이용 활성화,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는 크라우드펀딩 등 직접 조달 기회 확대
- 지원된 자금을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신규 기술 도입 지원] 새로운 소비와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지원을 통해 외식산업 혁신 성장동력 지원

- 자동화·무인화 기술과 5G·로봇·빅데이터와 AI 등의 푸드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비 부담 및 인건비 문제 해소 지원
-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스마트 외식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우수 지역 및 외식업 지구 중심으로 편성

다.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정보 전달 체계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기존의 농식품 정보 분석 사업(식품산업 정보분석, 농식품 소비정보분석, 식품산업통계정보(aT FIS) 등) 내 실화를 통해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에 관련 정책, 소비자 정보,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의 정보 전달 강화

- 식품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 및 판로 접근성 강화
- 식품산업협회 관계자와 식품정보 전문기관 등 정보 공급자·정보 수요자 그리고 정책 관련자의 정보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 구축된 체계를 통해 실제적 정보 수요를 반영하여 농식품 정보분석 사업을 내실화
-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 부문 애로사항을 조사 이외에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교육 및 컨설팅]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의 경영 전반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성 제고

- 영세·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 대상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지원
- 영세·중소 식품제조업체 **판로지원 사업**을 통한 전용판매관 임점, 해외바이어 박람회 연계, 라이브커머스 연계 등 마케팅 지원
- **신메뉴 개발, 세무·노무관리** 등 **컨설팅 패키지**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 [빅데이터 기반 경영진단 바우처 도입] 농식품 관련 전문기관의 **데이터 가공, 분석**을 통한 중소 식품제조/외식업체의 **경영진단 및 컨설팅**에 활용

라. 식품산업 혁신역량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및 규제발굴 절차 상설화

○ 식품산업 진흥제도의 **역차별·진입장벽** 및 **영업활동 제약** 관련 불합리한 **행정제재 정비**

-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과도한 등록/허가/인증** 등 자격요건
- 특정 업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특례인정** 추진
-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위한 **투자 관련 규제 검토**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중소/영세기업 간 역할을 분담한 **건전한 협력모델 확산**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상승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모색이 필요하며, **혁신을 어떻게 확충하고 어떻게 시장에 활용하는가**가 중요

○ 정부 규제가 **R&D 활동 저하, 신규 설비투자 제한, 필요한 외부자원 차단** 등 모든 유형의 혁신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혁신역량**이라는 요소 확충과 혁신의 활용 결과인 **신산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의 중요성이 확대

○ 식품산업정책과 내에 식품산업 관련 규제 개선 상시 대응팀을 신설하여 업체의 규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규제 개선 효과 평가 및 한계 등을 분석하여 규제 완화의 근거자료로 활용

○ 타부처 사업과 관련될 경우,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 예를 들어 세금 관련 규제, 첨가물 관련 규제, 노동 관련 규제 등의 안전에 대해 식약처, 노동부 등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형성하여 규제 개선 체계 구축

- 규제개선/불편 관련 상시 대응팀(농식품 규제 원스탑대응팀) 신설 및 운용을 통해 신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식품 관련 불요불급한 규제의 완화

2.3.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중장기 과제	현재 문제점	개선 방향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산업 원재료 사용량은 증가하나, 대부분의 원재료가 수입산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원재료 사용량 ('17) 1,715만 톤→('20) 1,855만 톤 * 2017년 이후 원재료 사용 상위 5개 품목은 밀, 원유, 옥수수, 원당, 밀가루, 국산 사용 비중은 원유(100%)를 제외하면 0.1%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적성 우수 품종 개발 국산 원재료 사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확대 전통식품, 전통주 시장 확대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구, 지역 네트워크 사업의 높은 유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를 제외한 네트워크-특구 사업의 차별화 필요 사업간 낮은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사업 통합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구성
한식산업의 성장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둔화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업체 중 한식업체 비중 ('18) 45.6%→('21)43.6 *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외국식 중 가장 낮은 평균매출액 (19,933만 원) 한식산업 강직성 해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음식점주 중 가장 높은 사업주 연령(56.1세, 전체 평균 53세, 일반음식점 평균 55세) * 평균 종사 기간 일반음식점 내 2위(13.0년) * 배달앱 이용 적합도 매우 낮음(배달앱 이용률 22.5%, 배달대행 이용률 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신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환경 구축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적합한 메뉴 개발 (국외) 홍보 강화
전통식품, 전통주 성장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산업화를 위한 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문화 계승 역량은 충분하나, 전문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낮고,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명인/사업체는 거의 없음. 정책 참여 기회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초기 비용, 서류 절차 등 지원 필요 * 낮은 공공기관 사업 참여 체감도(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트랙 전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명인 대상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육성 필요 * 전통식품 사업체 대상 정보 및 정부 사업 참여 기회 확대

2.3.1. 식품산업의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

- ◇ 식품산업과 농업 연계 강화를 통해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 체계 확립
 - * 식품(외식)산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지원정책 확대 및 직거래 강화
 - * 가공용 농산물 생산기반의 단계별 구축 지원
 - * 국산 농산물 이용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 유도

가. 식품(외식)산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지원정책 확대 및 직거래 강화

○ [식품제조업 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지원정책 확대]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한 사업 규모 확대

- 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제고 정책 중 가장 큰 규모인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추가수요 발굴을 통한 규모 확대**
-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지속 추진 및 확대
- ‘식재료 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세세부과제 중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뿐만 아니라 미래 식품산업을 위한 소재 확보** 차원에서 지속 추진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지원’, ‘중소식품업체 진단맞춤 지원’ 등 식품산업 국산 농산물 활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은 지속
- 홍보채널 다변화 및 지원대상 확대 검토를 통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용률 제고
- 보증금액 확대를 바탕으로 한 ‘구매이행보증보험’의 사업 수요 발굴

○ [외식산업 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확대]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 및 특산물 상품화 지원 및 홍보 강화

-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농식품온라인거래소(eaT) 시스템 본사업화 추진

- 농식품온라인거래소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¹⁸⁾

○ [직거래 강화] ‘(가칭)식품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식품(외식)산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직거래를 촉진

- 생산자-식품기업, 산지유통조직-식품기업, 지자체(농협)-식품기업 등 다양한 채널 별로 정보교류 및 판매지원 체계를 구축
- 플랫폼으로 산지정보와 식품기업 수요가 매칭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추진(예, 트릿지 사례의 국산 농산물 적용) 및 적극성과 기술적 우위를 가진 민간 플랫폼 기업 활용
-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경영체, 산지유통조직, 식품기업을 비롯하여 식품기업과 연계된 전처리, 반가공(소재) 업체 등의 구성원들이 플랫폼에 자체적으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 각종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별 우수사례 발굴 및 통합 사례집 작성·식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전파,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수혜 대상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 유도
- 이외에도 민간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에 식품외식기업 전용 직거래 장터 개설,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체와 MOU 등을 통한 지역 특산물, 신제품 농산물 활용 외식·음료 메뉴 개발 및 소비 확대 지원 추진 검토
- 국산 식재료 이용 외식업체 홍보 지원을 통한 소비 확대, 외식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국산 농산물 이용 실적을 ESG 경가와 연계 방안 도입 검토¹⁹⁾

18) 외식기업과 생산자 단체 간 수시 간담회 추진 및 품목별 직거래 가능 생산자조직 및 거래 절차, 직거래 우수사례 등 정보 제공이 있음.

19) 평가지표 및 운영방안 검토 시 ESG 평가 지표에 국산 식재료 구매 실적을 포함하고 우수 외식기업 대상 정부포상 추진하는 방안 등 검토

나. 가공용 농산물 생산기반의 단계별 구축 지원

○ [농업경영체 지원] 가공용 농산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기초 단계로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 지원사업 지속을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

- 품목별로 육성되고 있는 식량, 원예 농산물 공동경영체 및 산지유통조직 지원 정책에 가공용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포함 검토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발작물공동경영체 등이 가공용 농산물 생산을 확대할 경우 우선 지원
- 농업경영체 대상 계약재배 홍보 확대

○ [계약재배 강화] 소재식품산업 육성 차원에서의 가공용 농산물 대량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지원과 사업 규모 확대²⁰⁾, 계약재배 실효성 강화

- 원예농산물 생산안정제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기금 또는 자조금을 가공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조성하여 계약재배 사업 보조
-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수입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품목의 경우 계약 당시 해당 시기에 출하하는 조건을 적용하여 국산 농산물 이용률 제고와 농가의 계약재배 탈출 유인을 선제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²¹⁾
- 계약재배의 계약 당사자를 일정 경지면적을 확보한 농협 및 대규모 작목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가공용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지원] 식품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의 가공용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지원 정책 추진 검토

- 중견기업 이상 식품기업들은 농가 관리 어려움과 업무증가로 계약재배 선호가 줄어드는 상황임. 기업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중간지원조직이 기업을 대신

20) 계약재배 사업 실적은 2019년 93억 원에서 2021년 1,455억 원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식품산업에서 구매하고 있는 2020년 한 해 농축산물 구매금액은 26.8조 원과 비교하면 규모화가 필요

21) 현행 계약재배는 농협과 농가 간 출하량과 출하시기, 가격 등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농가가 출하시기를 조정할 유인이 높지 않음.

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생산자-기업 간 연계 촉진에 필요한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판촉·홍보 등의 비용 지원
- 가공용 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가공용 농산물 전문 유통조직 육성 추진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발작물공동경영체, 공선출하회 및 농협 등 계약재배 우수 이행 주체들이 공동으로 광역단위 가공용 원료 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다. 국산 농산물 이용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 성장 유도

○ [국산 원료 의무 이용 인센티브 강화] 국산 원료 의무 이용률 초과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식품제조업에서 시급한 개선사항은 식품산업 분야 의제매입세액공제 비율 확대(4/104-→8/108)임.
- 외식업은 108분의 8(과제표준 2억 이하는 109분의 9,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을 받고 있는데, 중소식품기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같은 104분의 4를 받고 있는 실정
- 쌀가공업종의 경우 정책 목적 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비율 인상 우선 고려
-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융자)’ 지원사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의무 이용률인 125%를 초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초과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

2.3.2.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

- ◇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으로 지역과 지역내 산업 성장 도모
 - * 지역단위 네트워크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연계 및 통합
 - * 농공단지 경쟁력 제고
 - *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확대
 - *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가. 지역단위 네트워크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연계 및 통합

○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개선] 지원금액의 효율화 및 핵심사업 위주의 지원정책 개편을 통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확산

- 사업 효율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던 범위를 목적에 따라 한정하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통합 2억 원→목적별 0.5억 원으로 개편)
- 지원대상 협의체와 협의체별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대 추진 및 예산 확대, '품목중심'에서 '컨텐츠 중심'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으로의 개편 검토
- 분야별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분석을 수행하고,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성과 확산 유도
- 지원대상을 농업생산단체에서 농촌, 지역의 푸드스타트업, 중소식품기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사업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사업대상자로 이어지는 기존의 체계에서 필요시 지자체가 농촌융복합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효율화

○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의 성장 촉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 개편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육성 혹은 사업 통합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구축사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네트워크

사업과 중복성 발생

- 중복성 완화와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을 지구사업으로 확대하는 체계 구축
- 탄력적 사업추진단 구성, 참여경영체 확정 절차를 구축하여 심사 및 선정,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과정 효율화 유도
- 특화품목(농산물) 기반이었던 기존의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특화품목 후보군을 폐지, 사업 대상 범위를 경관, 농촌문화로 확대하여 사업 유형 다양화
- 산업지구로의 성장사례 발굴 및 성과 기반 홍보 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 혹은 사업 통합을 통한 규모화 및 내실화 검토

○ [네트워크-지구, 사업-지자체 간 연계 강화] 지역단위 네트워크와 산업지구의 통합 가능성 및 연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고, 유사 사업 및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

- 산업지구로 성장하는 네트워크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을 통해 네트워크-지구 간 연계 체계 홍보 및 지구사업 참여 네트워크에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지원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 지구 운영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시도지원센터 참여 강화 및 수출기업으로의 성장 유도를 위한 관련 정책 정보 제공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업-산지 매칭사업, 식품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사업 단계에서 국산 농산물 사용량 DB화²²⁾
-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특화 식품산업 지원의 집적화·규모화 추진 검토

22) 판촉 능력이 부족한 지역의 영세 식품기업을 대신하여 지방정부에서 판촉 노력 전개, 지역 전략 품목의 특화와 수급 확보 독려, 지역 내 선도형 가공업체로의 육성을 통한 지역과의 동반성장 유도 및 중소식품기업이 국산 원료 산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식품업체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 등

다. 지역 특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수요 확대와 공급체계 구축

○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촉진] 지역산 농산물 및 지역 컨텐츠에 대한 민간수요 확보를 위한 고품질 차별화 전략 추진

- 국내산 및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20대를 타겟으로 ‘가치소비’ 트렌드를 활용하고 지역과의 상생,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한 고품질 차별화 전략 추진
- 로컬푸드 운동, 다원적 기능, 식량 주권, 윤리적 소비 등 기존 국산 농산물 장려운동 전개와 새로운 국산 농산물 장려운동 발굴 및 지역먹거리계획과의 연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 K-ESG와 연계하여 지역산 농산물 소비가 지역 및 환경에의 기여임을 강조·홍보
- 식품 대상 전면표시제도 도입 추진 시 제품의 주표시면에 제품의 국산·원산지 정보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법제화하여 원산지 관련 표기 인지도 개선
-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한 지자체 로컬푸드 식당 인증제 활성화 지원 및 국가단위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도입 검토

○ [수요 기반 원료 공급 추진] 지역단위 관계시장에 대한 식품 수요 및 시장 분석을 통해 계획적 상품개발 및 공급지원체계 구축 등 수요 기반 원료를 공급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군납, 고향세 답례품 시장 등 지역 관계시장에 대한 식품 수요에 대한 시장분석을 수행
- 계획적 상품개발 및 공급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
- 식품소비 패턴을 반영하여 유아, 학생, 고령자 등 대상 맞춤형 지역특화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그에 적합한 식품공급을 지원

○ [거래 안정성 확보] 지역특화 가공상품화 진단 및 개선을 통해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

- 현존하는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신활력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개발된 가공상

- 품의 상품성, 안전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DB화하고 주기적으로 수행
- 주기적으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라인 개선, 신시장 개척,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활력 지원
- 정부 정책에 따라 가공 적성이 높은 품종에 대해 원료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 농협 가공사업의 경우 농협 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지역 가공사업 및 식품사업 활성화 촉진

라.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과 지자체 협력으로 개선
 - 지역별 식품업체 간담회 개최
 - 공모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
 - 지자체 관련 법규 정비

2.3.3. 한식산업 진흥 및 전통식품·전통주의 성장산업화

◇ 한식 산업 육성과 음식관광 활성화
* 한식 관련 사업 추진체계 및 콘텐츠 집적화를 통한 한식진흥 기반의 조성
* 한식 진흥 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국내외 한식 확산 추진
* 전문인력 양성과 온라인/오프라인 해외 한식 인지도 제고를 통한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 전통식품·전통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외 소비 저변 확대
* 창업지원 및 운영지원을 통한 공급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판매플랫폼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 기반 마련
* 전통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가. 창업지원 및 운영지원체계 구축

○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에 진입한 청년·창업자 대상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창업 전에는 장소 임대 및 매매, 가공시설 설계 지원, 제조 및 판매 면허 발급과 관련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창업 후에는 제품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후속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등의 컨설팅에 집중
- 창업 업체를 성장단계별로 ① 창업 준비, ②창업 후 3년 이내, ③창업 후 3~7년으로 구분하고, 각각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검토
- 특히, 창업 이후 3~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용자 등의 자금지원 확대

〈표 6-4〉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맞춤형 창업정책 체계화	
창업 준비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방향 결정,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예비창업 패키지	창업교육, 멘토링을 통해 사업 구체화,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후 3년 이내	창업 제품·서비스로 사업화하여 시장 본격 진출	⇒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아이템 제작, 시장검증 및 마케팅 등 사업화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
창업후 3~7년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 및 기술 등 고도화 신제품 출시 등 기존 사업 확장	⇒	창업도약 패키지	기술개발, 판로, 해외진출 등 사업방향에 따른 특화 지원

○ [운영 지원] 고품질 원료 조달체계 구축 및 국산 원료구매 용자사업 확대 추진

- 전통식품은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이 높으며 영세하다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의 원료 공급망 구축을 검토
- ‘원료 공동구매’ 및 ‘구매보증 지원’사업 이용 확대,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100억 원)을 통한 계약 재배 활성화 유도
- 농업생산자단체에 대한 용자사업 우대금리와 유사하게 전통식품 및 전통주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예산확보 추진
- 전통식품 및 전통주 기반 산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지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농촌문화·관광을 연결하는 지역의 거점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
- (인력 양성)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인력 육성 추진, 전문대학 혹은 교육과정에 전통 식품학과 도입 및 인턴 사업과의 연계 검토

○ [기술 지원] 전통식품·전통주 관련 품질향상을 위한 발효제, 균주, 종균 및 제품 생산기술 등을 지원

- 산업화를 위한 유용 균주를 전통식품업체 맞춤형으로 생산·보급하여 전통발효식품 품질향상을 유도 및 품질 표준화 추진
- 세계김치연구소를 통한 김치 균주 보급, 한국 전통주 연구소의 양조용 발효제(효모, 누룩) 개발 및 보급, 순창장류연구소의 종균 보급 사업 확대 및 표준화 추진

나. 온·오프라인 판매플랫폼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 기반 마련

○ [판매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온·오프라인 판매플랫폼을 구축을 통한 판로 개척

- 한식 홍보관 ‘이음’, ‘전통주 갤러리’ 등 전통식품과 전통주에 대한 상시적인 전시·판매·체험 가능한 플랫폼 운영 확대
-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를 통해 전통식품 및 전통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 **[홍보 강화]** 높아진 한식의 위상을 바탕으로 전통식품과 전통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상품 개발·보급

- K-culture와 K-food 등을 통해 한식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정부 주관 행사와 연계한 한식행사 개최, 한식 콘텐츠 보급, 포럼 개최 등 전통식품과 전통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
-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통식품 및 전통주 관광상품을 개발·보급

다. (전통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협의체 구성]** 전통주산업 발전을 위해 ‘(가칭)한국 전통주 연합회’ 설립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소통창구로 활용

- 전통주 관련 단체들은 많지만, 통합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정책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통주연합회 부재
- 전통주산업 진흥과 소비 확대를 위해 우리술 대축제, 서울 국제주류박람회, 우리술 품평회, 대한민국주류대상, 술품질인증 등 많은 정책 및 사업들이 정부 주도로 진행
- 전통주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는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주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홍보·판촉·마케팅과 품질관리, 생산자 권리 등의 세부적인 산업진흥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파트너인 ‘한국 전통주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전환

라. 한식 관련 사업 추진체계 및 콘텐츠 집적화를 통한 한식진흥 기반의 조성

○ **[추진체계 개편]** 한식진흥원 운영 내실화 및 한식 관련 사업 추진체계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내 한식진흥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핵심 기관인 한식진흥원 조직 정비 및 사업 운영방식 개편
- 한식진흥원 직원 역량 강화, 자문체계 구축, 용역 및 공모사업 관리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통한 사업 추진력 강화

○ **[통계 강화]** 한식 정보 및 통계의 집적화와 확산 기능 강화로 해외에서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

- 한식 관련 통계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공개 창구 일원화
- 국내외 한식 산업에 대한 주요 현황 등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민간 한식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식아카이브DB의 정보 범위 확대와 온라인으로 통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존사업 지속 추진
- 한식포털을 중심으로 정보 수요자와 정보 공급자가 만나는 정보 제공 창구의 일원화 및 한식진흥원-한식포털-한식아카이브DB의 연계 강화
- 통합형 콘텐츠 제작 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생산과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홍보 강화
- 사용자 친화적 환경 및 콘텐츠·소통공간 구축을 통한 한식포털의 기능 강화 추진

마. 한식 진흥 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국내외 한식 확산 추진

○ **[인프라 활성화]** 한식문화공간 이음, 해외한식당 협의체 운영 확대 및 국내외 한식 관련 행사 참여 지원

- 한식문화관, 전통주갤러리, 식품명인체험홍보관이 통합된 한식 진흥 인프라인 한식문화공간 이음의 한식확산 국내 거점화
- 해외 한식 확산 현지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한식당협의체의 기능 강화 및 해외 거점화 및 재외공관과의 연계 강화
- 한식문화공간 이음과 해외한식당협의체를 중심으로 한식 관련 운영 프로그램의 통합화 및 다양화 추진
- 국내외 음식문화 관련 교류단체 및 기업, 행사 참여단체 대상 지원 확대
- 정부 타 부처 행사와 연계한 한식 문화 홍보 강화(한국문화축제 등)

바. 전문인력 양성과 온라인/오프라인 해외 한식 인지도 제고를 통한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 [전문인력 양성]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활성화와 한식 교육인력 대상 보수교육 확대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운용의 확대
- 한식 관련 교육인력, 강사 대상 보수교육 실시

○ [전문인력 활용] 현지 기관·대학·호텔 연계를 통한 육성된 한식 전문인력의 활용 강화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보수교육 이수자 DB화·이력관리 추진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보수교육 이수자 대상 인턴·취창업 지원과 연계 강화
- 한식 전문인력 국내외 해외 기관·대학·호텔 등 파견 및 현지 한식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해외 대상 비대면 한식 영상 공모전을 정례화·확대 운영을 통한 한식 인지도 및 소비 저변 확대
- 국내 대상 각종 행사와 연계한 한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2.4. 사회환경적 요구/변화 대응 식품산업 체질개선

중장기 과제	현재 문제점	개선 방향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경제적 여건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요인, 인플레이션,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국제곡물가격 급등 * 무역수지 악화 전망 • 감염병의 주기적/지속적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제한의 일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수급선 다변화 • 원재료 국산화 • 해외농업개발 투자 확대
식품기업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책임투자 비율 확대 대응 식품기업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연기금 사회적 투자규모는 131.2조 원 * 국민연금은 ESG 투자 기준 마련 • 식품기업의 ESG에 대한 낮은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에 대해 잘 아는 식품업체 비중은 10.7%(제조업 종사자 765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 ESG 경영이 실제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 7.5% • EU 탄소노미 규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ESG 실천 기준 마련 • 중소식품기업 ESG경영 지원 방안 마련
식품안전 관리 등 소비자 신뢰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생산 단계에서 농산물에 대한 PLS는 시행되고 있으나 축산물 PLS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 • 식품산업의 작업장 안전성(재해율) 지표는 감소 추세이나, 제조업 대비 격차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업과 제조업의 재해율 차이 지표는 2010년 0.19% p, 2015년 0.15% p, 2020년 0.17% p •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영양정보제공 수준이 타 국가에 비해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명영양표시제도, 외식업 영양정보제공 등 관련 제도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등 전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방안 마련 • 소비자 뿐만 아니라 작업자, 생산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필요 • 영양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소비자 건강 식생활 유도

2.4.1.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고도화

- ◇ 식품산업의 식품원료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체계를 확립
 - * 국산 식품원료 공급 확대를 통한 식품원료 공급 안정화
 - * 해외농업 개발을 통한 식품원료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
 - * 탄력적 할당관세를 이용한 안정적 식품원료 공급
 - *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가. 국산 식품원료 공급 확대를 통한 식품원료 공급 안정화

- [국산 식품원료 공급 확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안정적 식품원료 확보뿐만 아니라 미래 식품산업을 위한 소재 확보 차원에서 지속 추진
 - 대체육 등 콩 수요 확대에 대비한 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 기업에 원료 운송·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여 농가와 기업 간 원료 계약재배 체결 유도
 - 밀 생산 단지 확대 및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 국산 밀 건조 저장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산 밀 비축제도를 운영하여 국산 밀의 유통 및 비축을 체계화
 - 국산 식품 원료 수요 확대(홍보, 계약재배 연계 등)를 통한 국산 식품원료 공급 확대 유도

나. 해외농업 개발을 통한 식품원료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

- [안정적 해외 식품원료 공급 확대] 해외 공급기반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해외농업 개발을 지원하여, 수입선 다변화, 긴급 반입 물량 확보 등 회복력이 강한 식품원료 공급사슬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방안 발굴
 - 대학교육 및 인턴십 연계 해외농업 전문 인력 양성
 - 해외농업개발 관련 현지 정보 제공 강화

- 농림 ODA 간 전략적 연계 강화
- 진출기업 모니터링 강화 및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 구축

○ **[해외 식품원료 공급 원활화]** 해외 농업개발을 통해 생산된 식품원료의 공급 확대를 위해 통관절차 지원하며, 수입세제 혜택 지원함.

- 해외농업 개발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국내 반입 원활화를 위해 시행 중인 할당관세 및 수입권공매 등의 제도 확대 운영
- 해외농업 개발 식품원료의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 지원을 통해 국내 반입 원활화
-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국내 반입²³⁾ 지원절차 마련 및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

다. 탄력적 할당관세를 이용한 안정적 식품원료 공급

○ **[식품원료 할당관세]** 할당관세를 통한 식품원료 가격 안정화 유도 및 식품산업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의한 공급 리스크 저감

- 유연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식품원료 가격 안정화를 유도함
- 식품원료 가격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 할당관세 적용, 그리고 할당관세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식품 원재료 가격 안정화 및 적시 원재료 공급을 위한 관련 체계 구축

라.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원재료 협력체계 구축]** 원재료 공급망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재료 공급망 리스크 저감

- 국산 식품원료 공급, 해외농업개발, 식품원료 할당관세와 관련된 농림축산부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재료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마련

²³⁾ (국내반입명령) 곡물수급의 악화 등 비상시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개발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 명령(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

2.4.2. 식품기업의 ESG 경영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 ◇ 식품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 ESG 리스크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함.
 - * 식품산업 특화 K-ESG 체계 확립
 - * 전 가치사슬을 고려한 탄소중립 원

가. 식품산업 특화 K-ESG 체계 마련 및 지원

- [식품산업 ESG 평가 체계] 식품산업에 특화된 구체적인 ESG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 지원체계 마련
 -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고 국민이 직접 소비하는 식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 식품산업의 ESG 경영 확산
 - 식품산업 특화 ESG 평가지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목표치 설정 및 측정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서식, 플랫폼 개발
- [식품산업 ESG 협력 체계] 식품산업의 ESG 동반경영체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 EU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확산중인 ESG 공급망 실사 대응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맞춤형 ESG 경영 연계 프로그램 마련
 - 수출 대기업과 협력사간의 ESG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
- [식품산업 ESG 평가 지원] 중소 식품산업의 ESG 평가 지원을 통한 식품산업 내 ESG 경영 확산
 - 식품산업 ESG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식품산업 ESG 경영 기반 공고화
 - 식품산업 ESG 경영을 위한 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나. 전 가치사슬을 고려한 탄소중립 지원

○ [식품산업 생산 온실가스 감축] 식품산업식품산업의 전 가치사슬 중 식품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 지원

- 식품산업의 공통산업설비(보일러, 오븐 등)에 사용되는 연료의 저탄소 연료(LNG 등) 전환 유도
- 식품산업에서 활용되는 에너지를 저탄소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유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 감축량 인증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등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식품산업의 전후방 산업 온실가스 감축] 식품산업의 전 가치사슬 중 식품 원재료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 유도

- 식품 원재료 생산에서 발생 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활용 유도
- 로컬푸드 플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식품산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유도
- 유통 과정에서 냉동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CFC, HCFC, HFC 계열 냉매를 지구온난화 영향이 적은 대체냉매로 변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전후방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2.4.3. 식품안전관리 등 소비자 신뢰 제고

- ◇ 소비자의 식품 선택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층 대상 식생활 지원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건강한 식품소비/식생활 보장
 - * 농식품 표시방식 개선
 - * 스마트한 식생활교육 활성화
 - * 농식품 지원 확대
 - * 소비자 협력체계 구축
- ◇ 원료 농산물부터 제조·유통·소비 단계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농식품 안전성 제고
 - * 농산물 GAP 인증 확대 및 PLS 보완
 - * 축산물 HACCP 인증 확대 및 축산물 PLS 단계적 도입
 - * 제조단계에서의 작업자 안전관리 강화
 - * 유통단계에서의 신성장식품 안전관리 강화
 - * 안전 농식품 소비환경 구축

가. 식품 표시등 정보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식품 선택 역량 강화

- [식품정보제공] 소비자에게 식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표시방식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
 - 전면표시제도의 도입 검토, 고령자나 장애인, 청소년 등 누구나 식품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바코드, 음성정보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정보를 제공
 - 식품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한 식품 선택 유도에 효과적이면서도 식품업계의 고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설계 필요
 - 중소/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시 변경 시 포장지 등 관련 비용 지원 고려
 - WHO에서는 전면 표시와 관련하여 5가지 원칙을 제안
- [외식정보제공] 외식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확대된 반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외식 및 온라인 배달 분야의 표시 개선 및 정보 제공 확대
 - 외식업체에서의 영양정보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

- 외식분야 정보 제공이 소비자 정보 수요에 대응하는 차별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의표시제**로 선택적으로 적용, 표시 관련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 필요
- 배달주문 시 농식품 정보 제공 방식 개선 및 홍보
- 온라인 플랫폼상의 농식품 정보 제공/관리 방식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및 관련 업계 교육

○ [홍보 및 감시]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확대, 사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 감시 및 단속 강화

- 국가인증 농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소비자 이용도 높은 민간 플랫폼 활용 정보 확산
- 표시 및 광고 위반에 대한 감시 대상을 방송, 유튜브, 앱 등으로 확대

나. 맞춤형 식생활교육 확대에 효과 제고

○ 스마트 식생활교육 확대

- 공익광고, 캠페인, SNS 챌린지, 유튜브, 인플루언서 활용 등을 통해 건강한 식품 선택과 영양관리, 이로 인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에 관한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필요
- 문자 상담 등 상시 식생활 교육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

○ 생애주기 대상 식생활교육 강화

- 고령자를 위한 영양불균형 해소와 식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식생활교육 확대
- 어린이/청소년 식습관은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로서 전 생애주기의 식습관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체험 중심 식생활교육프로그램 확대, 학교 교육과정(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교실 등)에 식생활교육 확대
- 양육자가 자녀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식생활·영양 교육 중요

- 1인 가구, 청년, 직장인 등 식생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개선 서비스와 통합 제공, 요리 커뮤니티 지원

○ 농식품바우처 등 식품지원 사업과 연계된 식생활·영양교육

- 정부의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식생활 개선을 위해 **식생활 교육사업 병행** 추진
-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 식품비 지출 한도액이 작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하에서의 현명한 식품소비, **가성비 좋은 영양소 섭취** 등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
- **연령에 따라** 모바일 및 디지털 기기의 콘텐츠 이용을 병행하거나, 대규모의 집합 교육보다는 **활동 및 체험이 결합**되어 소규모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의 교육 진행
- 지역의 **복지사업**(지역통합돌봄사업, 돌봄서비스사업, 아동급식, 노인급식 등)과 **연계** 운영

○ 지역 단위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 지역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시 **식생활교육 포함**,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기관 협업으로 신규 교육 프로그램 발굴/운영, 지역 내 유희시설 활용하여 공동체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농산물을 지원**하여 **식생활교육** 실시
- 식생활교육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확대
-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

다. 국민 식생활 보장을 위한 농식품 지원 확대

○ [현물 중심 농식품 지원]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지원을 국민의 식생활 및 영양 보장을 위해 현물 중심 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 추진

- 취약계층의 식생활 보장 및 국내 농업의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을 위해 취약계층 건강에 필요한 국내산 농식품 구입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본 사업화** 추진

-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체계 개선 및 모니터링 구축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본 사업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추가 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내 소관 개별법 개정 추진
- 국내산/지역산 농식품 연계 기반 급식 식재료 지원 확대

○ 소비활성화 사업 등으로 재정지출 시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선택 유도 강화

-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소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나, 농축산물 및 외식 소비활성화 사업에 든 재정지출이 향후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사
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지도록 설계·추진 고려
- 재정지출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 시 우수농축산물 구매 유인 제공

라. 소비자 협력체계 구축(3차 소비자 정책참여 확대)

○ 소비자 참여 기회 확대

- 명예감시원 확대, 대학생 사이버 감시단 운영 확대
- 소비자단체 협업 사업 확대: 간담회 정기 개최, 소비자 열린포럼 운영
- 소비자 온라인 모니터단 운영
- 유망 식품업체, 우수 지구 등 정책 현장에 소비자 참관/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차원의 식품 거점 및 커뮤니티 강화를 추진

- 생활협동조합 등 생산자-소비자 접점의 커뮤니티 강화
- 지역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 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공유를 확대

○ 식품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및 소비자단체 협력 강화 환경 조성

- 정부는 식품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행, 또는 ESG 경영의 관점에서 소비자 식생활 및
영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인 제공

- 소비자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를 통한 건강한 식품 환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 운영, 농식품부-소비자 간담회, 소비자-생산자 공동 참여 프로그램, 소비자 팸투어 확대를 통해 **합리적·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공감대 마련
- 소비자단체와 정책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발굴** → 소비자와의 **정책 파트너십** 형성 필요

마. 농산물 GAP 인증 확대 및 PLS 보완 추진

○ 농산물 GAP 인증 활성화를 위한 판로 및 홍보 확대

- 농가 GAP 인증 절차 간소화 및 **교육 확대**
- GAP 제도와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 사업, 교육·홍보, 민관협업 등 추진
- 토양·용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시설 개보수로 위생·품질 제고**
- GAP 인증 농가 대상 웹, SNS 마케팅 등 **교육 지원** 및 **상품성 강화**를 위한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등 **신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GAP 인증 확대 견인
- 20% 농축산물 **소비쿠폰과 연계한 GAP 기획판매전 개최**
- 소비자단체 및 영양사 등 소비 주체 대상 **교육·홍보 지원**으로 GAP 가치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PLS 정착 지원

- **부적합 고위험군(품목·지역) 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
- 최근 3년간 부적합 다빈도 품목 등 **고위험군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사전 차단
- 농경지(배지)의 **잔류농약, 중금속 조사**와 농업용수의 **식중독균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 요소 사전 파악** 및 농가 지도

- 친환경·GAP인증제, 수출농산물 등 주요 농식품 정책사업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통해 신뢰도 향상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부적합 농산물 발생 모니터링,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위하여 'PLS 시행반' 구성 및 운영
- 잠정기준을 정식기준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작물, 병해충 방재용 농약 등 농약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등록 농약 확대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지자체)을 통해 사전 컨설팅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및 농업인 실천 제고를 위해 살포 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대한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 실시
- 현장 애로사항을 상설 접수할 수 있는 현장 상담센터 운영

바. 축산물 HACCP 인증 확대 및 축산물 PLS 단계적 도입

○ [인증 교육 및 홍보] 사육단계부터 위생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농가 HACCP 인증 확대 및 동물약품 안전사용 기준 지도·홍보 강화

- HACCP 인증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및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가 안전사용 기준 교육·홍보 지속 추진
- 축산물 HACCP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HACCP 인증 희망 업소에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 [생산관리 강화] 생산단계부터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성 제고

- 산란계 농가 대상으로 지도·홍보 및 중점 관리(연중 살충제 검사) 지속 추진
- 농장의 계란 및 도축장 식육에 대한 미생물 지속 관리
- 낙농가·집유장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한 원유 생산을 위한 행동 요령 등 지도·홍보

○ 축산물 PLS의 단계적 도입

- 축산물에 잔류물질 PLS 도입을 추진하되 관리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 단계적 도입 필요
- 한육우·젖소(乳)·돼지·닭·산란계(鷄卵) 대상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4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 농약은 축산에서 비의도적 오염인 점을 감안, 기타 축산물의 동물약품과 함께 '24년 이후 적용 추진
- 동물약품 확충 및 안전사용기준 정비를 지속하고, 축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교육·홍보 지속 추진

사. 제조단계에서의 작업자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강화] 식품제조업의 재해율이 일반제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필요

-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지원
- 컨설팅 및 노후 장비 교체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영세 외식업체(바닥면적 100㎡ 미만)의 재해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 안내 및 보험료 지원

○ [환경변화 고려] AI/로봇/무인자동화(kiosk, 서빙 로봇 등)가 확산되면서 식품산업에서는 기존에 없던 로봇, 자동화 설비 등 농식품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서빙·조리로봇 등 외식업 분야 협동로봇의 위생·안전 기준 마련
- 식품제조업 분야 무인자동화 설비 운영 및 안전 점검 기준 마련 및 작업자 안전관리 지도·단속 강화

아. 유통단계에서의 신성장식품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트렌드 반영 신성장식품 안전관리 기준 마련 필요

- HMR,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지침 마련, 안전관리 강화, 위생 취약 분야의 기술 지원 확대
- 음식점 주방 공개 유인 제공, 배달·테이크아웃 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한 배달·테이크아웃 음식 안전관리 강화
- 온라인 배달 신선식품, 해외 직접구매 농식품 등 유통 과정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식품군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 검토 및 가이드라인 작성
- 대체 소재 개발, 신기술 응용 식품 등 신식품 개발·판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농식품 안전관리 기준 마련 필요

자. 안전 농식품 소비환경 조성

○ [안전 소비환경 조성] 농식품 안전관리는 농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규제로 인식되는 상황임, 식품산업의 성장·진흥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 안심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식품기업과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안전 농식품 소비환경 조성이 필요

- 식품 안전 우수 식품제조·외식업 사례(위생뿐만 아니라 작업자 안전, 유통단계 안전, 포장재 안전까지 포괄) 홍보 및 단계적 인증제도 도입

○ [안전체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소비자 보호, 위해 정보 수집 및 제공 강화, 정보 접근성 강화, 신유형 식품 및 식품 안전 관련 소비자 교육 확대, 농업인 및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 지원

- 식품 안전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협력으로 위해 식품 단속 효율화 및 식품 위법행위 엄정 대응
- 위해 식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강화 차원에서 사업자 등에 대한 주의 환기, 문제 있는 식품의 리콜 촉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등의 원인조사, 분석을 위한 체제 정비

- 소비자의 식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식품 위해 평가 적극 대응 및 과학적 분석 기반 위해정보 공유
- 방송, 유튜브, 앱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식품 안전 관련 소비자교육 강화
- 식품기업의 소비자 의견 청취 강화를 위해 소비자 중심경영 기반 확대 지원

